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6~20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6~2007

인 쇄 2006년 12월 28일

발 행 2006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1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6~2007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연례정세보고서 ; 2006)

권말부록으로 “2006년도 주요 사건일지” 수록

ISBN 978-89-8479-388-0 93340 : ₩6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600292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6~2007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 |
|----------------------|----|
| I. 동북아정세 | 1 |
| 1. 동북아안보정세 | 3 |
| 2. 북핵문제와 6자회담 | 17 |
|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23 |
| 가. 한·미관계 | 23 |
| 나. 한·중관계 | 30 |
| 다. 한·일관계 | 35 |
| 라. 한·러관계 | 38 |
| II. 북한정세 | 43 |
| 1. 대내 정세 | 45 |
| 가. 정치동향 | 45 |
| 나. 경제동향 | 49 |
| 다. 사회동향 | 57 |
| 라. 군사동향 | 64 |
| 2. 주요 대외 관계 | 68 |
| 가. 북·미관계 | 68 |
| 나. 북·중관계 | 74 |
| 다. 북·일관계 | 79 |
| 라. 북·러관계 | 81 |
| 3. 대남동향 | 86 |

| | |
|--------------------------------|-----|
| Ⅲ. 남북한관계 | 91 |
| 1. 남북대화 | 93 |
| 가. 장관급 회담 | 93 |
| 나. 경제분야 회담 | 98 |
| 다. 군사회담 | 101 |
| 2. 남북교류협력 | 105 |
| 가. 경제분야 | 105 |
| 나. 사회분야 | 109 |
| 3. 인도주의 사안 | 114 |
| 가. 대북지원 | 114 |
| 나. 이산가족문제 | 117 |
|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 122 |
| 라. 인권문제 | 125 |
| | |
| 부록: 2006년 주요 사건일지 | 131 |
| |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9 |

I

동북아정세

1. 동북아안보정세

2006년 동북아 안보정세는 미·일 대 중·리로 느슨하게 대립되어 있는 안보구도가 각기 양측을 중심으로 전략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구도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지향하는 경직된 대결구도가 아니며, 4국간의 실질적인 외교행태는 국익과 실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기 양자회담을 통하여 공동이익에 관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익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의 외교관계는 전반적으로 갈등보다 협력이 돋보인다. 아베 일본 내각이 새로 출범(9.26)한 이후 중·일과 한·일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역내 안정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은 미·일·중·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켰다. 중간선거(11.7)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는 보다 긴밀해졌다. 동북아 4국관계가 국익과 실리 위주로 재정립되어 가는 과정은 하노이 APEC 정상회담(11.18~19)을 계기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가. 미·일 대 중·리의 대립구도

미·일 양국은 2003년 초부터 주일미군의 역할과 일본의 방위력 재편에 관한 협상을 전개해왔다. 그 후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미·일 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2005.10.29)하였다. 2006년에는 주일미군 재편안을 최종적으로 승인(5.1)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를 정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주일미군 재편 계획에 의하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군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미래형 사단의 거점사령부(UEx)로 재편하고 2008년까지 일본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며, 이 사령부는 유사시 주일 미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거점이 된다.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는 2010년 도쿄 소재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로 이전하고, 미 제5공군 사령부와 항공총대사령부는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창설하여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 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기동전개부대 사령부는 2014년까지 괌(Guam)으로 이전하고, 기타 해병부대는 재편된 해병기동전개부대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일 양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처하며 일본의 군사적 활동범위를 미국과의 협력아래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미국은 2003년부터 미·일·호주 ‘3자 전략회의’를 주도하며 호주와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우방국들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미국은 NATO 정상회의(11.28~29)에서 일본·호주·한국·스웨덴·핀란드 등 5개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성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NATO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독일 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인도를 영향권에 포섭하기 위해 중국과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대표단을 인도에 파견(2005.4.22)하여 F-16전투기 판매 등 군사지원 의향을 전달하였고,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2005.7.18)하여 양국간 핵협력 협정에 합의

했다. 올해 부시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3.1)하고, 경제협력과 국방협력을 증진시키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 강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2005.8.18~25)도 실시하는 등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략미사일군을 중심으로 한 군 개혁안을 발표(2.28)하고, 미국의 미사일(MD) 방어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무기 ‘토플-M’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무기 개발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러 양국은 항공모함의 공동 제작·생산에도 합의한 것으로 보도(10.26)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이전에 첫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2016년 이전까지 러시아와 공동으로 3척의 항공모함을 만들 방침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수호이-33 함재 전투기 50대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간 밀월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중국은 2006년을 ‘러시아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벌였다. 푸틴 대통령은 1,00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북경을 방문(3.21~22)하여 양국간 우의를 과시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중·러 공동성명에 의하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중국 신강을 연결하는 2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5년 후부터 중국은 매년 8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게 되었다. 그 후 양국 총리회담(11.9)에서 에너지·통상분야 등 모두 14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원유와 전력 공급을 약속하였다.

중·러 정상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여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주도해 나가며 이를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SCO는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중·러·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지만 점차 경제·안보협력체로 확대·발전되었다.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5차 SCO 정상회의(6.15~18)에는 6개 회원국 정상과 옵서버로 있는 이란·파키스탄·몽골의 정상과 인도의 석유천연가스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안보·경제협력·교육 등 다양한 지역현안들이 논의되었다.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개별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이란 핵동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6개 회원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중국-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는 도로건설 등 모두 2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SCO는 이미 세 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에도 러시아의 우랄 군구에서 SCO 6개국 대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방국가들은 SCO의 군사동맹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미국의 일본·대만·인도를 잇는 포위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라오스와 정상간 상호 방문을 실시하며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10년 내 운남성과 베트남·라오스·태국 등을 잇는 범아시아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남부에서 개최된 중·아세안(ASEAN) 박람회를 계기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아세안 10개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개최(10.30~31)하고 경제·군사·문화 방면의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FTA)를 설립하고 2015년에는 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라오스와 FTA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비핵화조약」에 서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은 인도와도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인도를 방문(2005.4.9~12)하여 국경문제 해결에 관한 원칙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2006년 인도 국방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군사교류 확대에 합의(5.29)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11.21)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FTA 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핵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해묵은 반목의 뿌리인 국경 분쟁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인도를 방문한 직후 파키스탄을 방문(11.23)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파키스탄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의 핵 협력에 대항하여 파키스탄과 핵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나. 미·일·중·러의 외교적 협력과 갈등

미국은 중·러를 전략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이들의 협조 없이는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적인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억제 등 동북아 지역 차원의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

럽다. 따라서 양국의 세력 팽창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극단적 대립은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중·러와 외교적 접촉을 긴밀히 하며 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순응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러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지역 안정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국제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며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4국간 외교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반복하여 표출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대미관계의 안정적 구축’을 대외정책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고,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미·중 고위급회담(2005.8.1~2)에 미국측 대표로 참가한 졸릭(Robert Zoellick)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고 표현했다. 그 후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행동하면 이에 상응하여 대중국 협력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4.20)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란 핵문제, WMD 확산방지, 중·대만 문제, 미·중 통상문제, 중국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이란 핵문제에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 시장접근 확대 및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해선 “계속 노력하겠다”며 원칙적 수준

에서 답변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는 중국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신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고 반박하며 서구민주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민주주의체제임을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협력범위에 관한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실무차원의 실질적 협력은 계속 확대되었다.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 국방부도 중국과 군사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군사 핫라인 설치에 합의(2005.4)하였고, 윌리엄 팰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을 방문(5.9~15)하여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과 군사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7.5)한 후 미·중간 협력관계는 보다 긴밀해졌다. 중국은 미·일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695호 채택(7.15)을 지지했고, 탈북자·위폐 문제 등과 관련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미 재무부는 대북 금융제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우이(吳儀) 부총리와 회담을 개최(9.22)하고, 양국이 매년 두 차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경제전략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양국간 협력이 긴밀해지자 이와 더불어 미·중 군사협력도 강화되었다. 귀보승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미국을 방문(7.18~24)하여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미·중 합동 군사훈련 및 군사교류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미국과 중국 해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사상 최초로 1단계 합동수색·구조훈련을 실시(9.20)하였다. 그 후 2단계 합

동훈련은 중국 광둥성 동쪽 남중국해에서 실시(11.19)하였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구조나 북한의 핵실험 같은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오관을 줄이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 또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러시아는 WMD 확산과 테러 및 마약 방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협력하는 한편, 이라크·이란·북한 문제 등 자신의 이해가 중대한 지역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이 인권·민주화 문제 등을 내세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에서 개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7.15)에 앞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부시 대통령은 언론·종교 자유보장 및 이라크 민주화 문제 등에 푸틴 대통령이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에 이식한 것과 같은 민주주의는 원치 않는다”며 공박(7.14)하였다. 그러나 G8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세계 핵에너지, 핵무기 및 테러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나 이란이 테러 세력에 핵 물질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핵테러방지구상」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전 지구적 핵테러방지구상」(GICNT) 회의를 개최(10.30~31)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5대 핵보유국인 미·러·중·영·프랑스와 일·독·호주·캐나다·이탈리아·카자흐스탄·터키·모로코 등 13개국이 참여하였다. 공동성명은 테러단체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핵과 방사능 물질 및 재료의 파악과 통제, 물리적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핵테러방지구상」은 사실상 PSI 및 「컨테이너안전구상」(CSI)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 집권 기간 중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조어도(센카쿠열도) 영유권,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일·중관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새로 취임(9.26)한 후 급속히 개선되었다. 중·일 양국간 정상회담은 2005년 4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1년 6개월간 단절 상태에 있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중·일 정상회담(10.8)을 개최하였다. 아베 총리는 중국을 첫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정한 것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아베 총리의 방문을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공통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촉발된 긴장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 후 중·일 외무장관회담을 통하여 역사 공동연구에 합의했고, 고위급 군사회담(11.29)을 열고 2007년 중 중국의 차오강촨(曹剛川)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날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10.9)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깊이 논의하게 되었다.

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협력 증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안보리는 긴급회의(10.9)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후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10.14)하였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WMD와 군사장비 및 사치품들이 북한에 제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금융자산과 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WMD 확산 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일본은 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더 강경한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여 은행을 통한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북한과 국경지역에서 무역물품을 검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식량 제공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비편파적이고 균형 잡힌’(unbiased and balanced)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이 평양에 파견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10.19)을 하고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밀접촉을 주선하여 6자회담 재개를 선

언(10.31)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중의 전략적 대화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급회담(11.8)에서 양국은 국제현안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번즈(Nicholas Burns)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 핵문제가 미·중관계의 정면 한 복판에 위치한 문제라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미국 의회 중간선거(11.7)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및 테러전쟁 수행방식 등에 대한 신임투표성격을 띠고 있었다.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여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하였다. 선거에 패배하여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의 상징적인 조치로서 강압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럼즈펠드(Donald Henry Rumsfeld) 국방장관을 교체하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11.18~19)을 계기로 개최한 개별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11.18)하였다. 후진타오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11.19)에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푸틴 대통령과 미·러 정상회담(11.19)에서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한 양자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11.18)에서 양국 무역·환경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후

진타오 주석은 아베 총리의 일본 방문 요청을 수락하여 2007년 초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중·일·러 사이의 외교·안보 차원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국익위주의 실용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자 경제 현안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중간 무역수지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2005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418억 달러, 수입은 2,4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는 2,01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최초로 1조 달러를 초과(11.7)하였다. 베이징에서 개최(12.14~15)된 제1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는 미국측 대표로 폴슨 재무장관,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등 미국의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 7명이 참석하여 사상 최대의 경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 경제의 강력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번영을 위해 중국은 위안화의 환율 유연성을 높이고 미국은 국민저축을 늘리는 데 힘쓰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무역장벽 해소, 중국의 금융서비스 개방,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 장벽 해소 등을 위한 5개 실무단을 만들어 항목별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제2차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2007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라. 전망

2007년도 동북아 안보정세는 미·일 대 중·러의 느슨한 대립구도에 기초할 것이나, 군비경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미·일 양국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MD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일미군 재편계획에 입각한 군사력 재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일본은 2007년 1월 방위성을 공식 출범시키고, 미군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자위대의 해외파병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일·호주 3국은 전략적 대화를 긴밀히 하며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3국의 전략적 협력구도에 인도도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중·러 양국도 첨단무기 개발에 협력하며, 중·러 양국 합동군사훈련 및 SCO 6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중·러는 양국의 군사협력을 미·일동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내년에도 이라크·이란 등 중동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은 북핵 위기의 안정적 관리 및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두고 추진 될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관한 국제협력체제 유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중국을 통한 북한 설득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미·중은 전략적 대화를 통하여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미·중 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마찰 및 인권문제 관련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국제안보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미·러 사이에는 러시아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암살 사건 및 임기 만료(2008.5)되는 푸틴 대통령의 3선 개헌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인권·민주화 등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7년 초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 외교관계를 정상화

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친미보수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이념성향이 일·중관계를 일정 수준이상 개선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5년간 집권이 보장되면 아베 내각은 보수주의적 이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5년 내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개혁,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부여 등의 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과 다시 외교적 마찰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경올림픽(2008.8)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미·일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도 동북아 안보정세의 최대 변수는 여전히 북핵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적 입지는 이라크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지가 약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2007년 후반기에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연말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어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국신 · 동북아연구실 실장

2. 북핵문제와 6자회담

가. 북한의 핵실험 실시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지배하던 북핵문제는 2006년도에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였다. 북한의 핵실험(10.9)이 그것이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처음에는 '선(先) 경수로 제공' 나중에는 '선 금융제재 해제'를 내세우며 미루어왔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북한 지도부는 제5차 2단계 6자회담에 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은 2006년 후반부터 벼랑 끝 전략의 일환으로 일련의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먼저 모두 일곱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7.5)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계속 포착되었기 때문에 발사 자체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지만, 한국시간 새벽 3시 반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모두 일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10.3)했다. 성명의 골자는 첫째,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통한 위협 및 핵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세 가지였다.

이후 북한은 함경북도에서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

표(10.9)했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2005.2.10)한 이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물리적으로 입증하는 조치이자 북한 정권이 김일성과 김정일 2대를 이어 집요하게 추진해온 핵무기 개발 계획이 성공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건이었다.

핵실험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번 실험이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성공한 핵실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핵실험을 자축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10.20)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평양시 민과 군인 등 10만 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당과 군 그리고 과학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핵실험이 성공적이었고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후 북한당국은 전국에 핵실험을 자축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핵보유국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나. 유엔안보리 결의안(1718호) 채택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불씨를 당기는 사건이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경고하는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국제분위기는 10월의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정권의 모험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채찍을 들기로 결정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라는 강력한 법적 문서를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

택해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에 미사일 발사위협으로 북·미 직접 협상을 이끌어내었던 북한이 2006년에는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라는 상반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9·11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안보질서가 그만큼 급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남한과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그토록 자제를 촉구했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 그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함으로써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매우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전투기나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도 북한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중요한 통치수단인 사치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앞으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은 독일의 벤츠 자동차나 스위스의 롤렉스 시계, 혹은 프랑스산 꼬냑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06년 11월 30일 유엔제재위원회에 60여종의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을 제시(11.30)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사치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번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국제평화를 해치는 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주어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것

이 이번 제재결의안이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다. 북·미 베이징 접촉과 제5차 2단계 6자회담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채택으로 북·중간 무역거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한국정부의 쌀·비료 지원 중단 등 경제적인 압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베이징에서 개최(11.28~29)된 북·중·미 3자 접촉에 참가했다. 특히 북·미 양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은 양일간 모두 15시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진지한 논의를 했다.

이 회담에서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북핵 폐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2008년 말까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경우에 미국 역시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당근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지원, 중유 등 에너지 제공 재개, 북·일 수교를 통한 보상금 지급, 테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미 외무장관 회담, 남북한·미국 정상의 한국전 종선선언문 서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사항은 2008년 말까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과 더불어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초기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초기 조치는 베트남에서 열렸

던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11.15)에서 북한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사항들로서, ① 영변의 흑연감속로 등 핵관련 시설의 가동중단, ②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쇄, ③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 수용, ④ 핵관련 모든 시설과 계획의 신고 등이다.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베이징 북·미 양자회담 결과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를 공식 발표(11.1)하였고, 13개월 만에 제5차 2단계 6자회담(12.18~22)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측에 초기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제시한 반면, 북한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비핵화 논의 방안과 철저히 연계시켰다. 북·미 양국은 BDA 관련 문제도 별도의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다루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서 6자회담은 차기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폐막했다.

라. 전망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에서는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의 동북아 3개국 방문, 중국 당자시안(唐家璇) 부총리의 워싱턴과 평양 방문 등으로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예방하고 북핵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북한 핵에 대응해서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남한의

일부 인사들은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런 논란들 속에 동북아에서 핵도미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미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10.20)에서 남한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앞으로 북핵문제의 향배는 제5차 2단계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07년 초에 있을 BDA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6자회담이 지속되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북핵 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도 1/4분기는 북핵 위기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성훈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한·미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 있다. 2006년의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미동맹의 재조정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책협력문제였다. 한·미 안보동맹관계는 한국 방위의 ‘한국군 주도, 주한미군 지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개혁 2020’ 계획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신장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미동맹의 재조정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균형적 실용외교’와 미국 부시 정부의 국방전략 변화가 맞물리면서 동맹의 미래발전 차원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실무협의체를 가동(2005.2)시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SA), 미래 동맹 비전 공동연구(JVS), 군사지휘관계연구(CRS)로 구성된 동맹조정 3단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환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미 양국은 경주 정상회담(2005.11) 합의에 따라 2006년 외교장관이 대표하는 첫 한·미 고위전략회의(1.19)를 워싱턴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으며, 미국측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존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이 요청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협력방안 8개항 가운데 5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PSI 공식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연초에 “안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PSI 완전 참여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와 핵실험(10.9)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1718호) 이행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정부의 공식입장’(10.11)에서는 “이미 우리는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PSI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어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보고서 및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우리입장’(11.13)에서 한국의 PSI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는 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하고,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해운 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양국 간의 합의로 마무리된 이후 전시작전통제의 한국군 환수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동맹의 질적 발전 과정”으로서 “한·미 동맹조정 4년간의 공동연구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2006년 8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갈등 사안으로 등장했다.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2005.10.21)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문제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한·미는 SPI 실무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위한 약정’(TOR)을 체결하여 기본방향을 합의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제10차 SPI 회의(9.27~28, 워싱턴)에서 미래 동맹비전 공동

연구(JVS)를 공식 마무리 지었다. 이어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SCM(10.20)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 간의 SCM이 열리기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 회담(10.14)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 후 그에 따라 지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 한국의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현황’(9.11) 자료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중간 마스터플랜(Pre-Final Master Plan)을 검토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 자료에서 국방부는 2007년 초에 평택 이전 기지의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결되어야 할 빈집철거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한·미 간 시설별 비용분담문제와 CAI 이전비용문제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대 시위과정에서 군·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연례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은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 (1차: 5.22~23, 하와이, 2차: 6.29~30, 워싱턴, 3차: 8.9~10, 서울, 4차: 10.10~11, 서울, 5차: 11.13, 워싱턴, 6차: 11.29~30, 서울) 진행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결국 2007~2008년 2년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에 최종 합의(12.6)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2007년에 한국은 7,255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2008년 분담금 총액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은 양국의 경제·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 변화의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으나, 동시에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갈등요인으로 등장한 사안이 기도 하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USTR)는 미 의회 의사당에서 한·미간 FTA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2.3)하였다. 이후 두 차례의 사전준비협의를 통해 협상분과 구성문제, 문서 비공개 문제, 협정문 초안 교환 시기 등과 관련 합의를 이루고 제1차 협상(6.5~9, 워싱턴 D.C.)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FTA 협상은 상품무역, 무역규제, 농업, 섬유,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17개 분과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협상이다. 제1차 회담 이후 제2차(7.10~14, 서울), 제3차(9.6~9, 시애틀), 제4차(10.23~27, 제주), 제5차 협상(12.4~8, 미국 몬태나 빅스카이)등 한·미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제2차 회담에서 예정되었던 4개 분과회의(무역규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협상 도중의 중단과 같은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한국 정부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였으며 상품무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집회들이 계속되었으며, 일부 반대 집단들은 미국으로 원정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제6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2007.1.15이 시작되는 주)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제5차 6자회담(2005.11) 이후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북한은 2006년 미국의 독립기념일(7.4)에 맞춰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

를 시험 발사하였으며, 핵실험(10.9)을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한·중·일·러 4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7.7~9)하여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 및 6자회담 재개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9.14)이 열려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뉴욕에서 실무협의(9.20)를 가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의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이 6자회담 참여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잇달아 열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응방안 조율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10.19)하였다.

그리고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1.19)에서의 합의에 따라 서울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번즈(R. Nicholas Burns) 국무부 정무차관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제1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11.7)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 차관은 한·미 동맹관계,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등을 비롯하여 동북아 정세, 국제안보협력, 유엔 개혁 등 양자 현안, 지역 및 범세계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이 합의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의 실현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관련 문제 및 회담 대책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같은 시기에 조셉(Robert Joseph) 미 국무부 군축안보차관도 서울을 방

문,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발표(10.31)함에 따라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하노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협의(11.15)를 갖고 6자회담 재개 관련 대책 및 공동성명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제9차 한·미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12.15)에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 특히 미국측이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 희망국들의 비자 거부율 조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한국의 VWP 가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의 한·미관계도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동맹관계 재조정문제,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북핵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제5차 2단계 6자회담(11.18)의 결과가 한·미 간의 정책협력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베이징에서 열린(10.28~29) 6자회담 미·북·중 수석대표들의 3자 협의 및 미·북 양자협약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북한측이 협상의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거나 기존의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선 '적대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협상을 지체시키는 전술을 펼치는 경우, 한·미 간의 정책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6자회담의 재개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당국 간 관계의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시 정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넘겨주게 된 이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및 PSI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입장과 부시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분리 회담 전략에 영향을 받을 경우, 한·미 간에는 매우 세심한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6자회담의 지속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측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재개를 의도하는 경우, 한·미 간의 정책조율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문제는 제38차 SCM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 한국으로의 전환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회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평택으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개혁 추진계획에 따른 독자적인 방위능력의 신장과 한국내의 반미 정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009년에 조기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급적 2012년에 전환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군사·안보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지만, 양국 국방 당국 간의 협의과정이 국내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07년은 초기부터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반미'가 정치공학적 또는 정략적인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2007년도의 한·미관계는 또한 1월 중순에 열리는 제6차 FTA 협상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더욱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또한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시 ‘반미’와 연계되어 정치공작적 또는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될 경우, 협상 자체는 물론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7년의 한·미관계는 균형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안보동맹의 재조정문제는 상호 존중하고 능력과 책임을 서로 나누어 갖는 관계로 보고, FTA 체결 협상은 경제·통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의 질적 발전 측면에서 보며,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는 양국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 문제들이 균형의 시각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라는 한국 내의 정치적 상황과 그 상황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증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박영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한·중관계

2006년도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7.5)와 핵실험(10.9) 감행으로 한반도 안정이 훼손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협의와 협력이 빈번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 국방장관회담(4.15~19), 외교장관회담(6.26~27), 정상회담(10.13) 모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것이었다. 상기 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이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보에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이 더욱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대북 노력이 긍정적이었음을 평가하였다. 이렇듯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 공동의 인식과 행동의 폭을 넓혀 나간 한 해였다.

츠하오텐(遲浩田) 국방장관이 방한한 지 6년 만에 차오강촨(曹剛川) 국방장관이 방한하여(4.15~19) 한·중 국방장관 회담(4.17)을 가졌다. 차오강촨 국방장관의 방한은 그의 방북(4.4~6) 직후에 실현된 것으로 북·중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6자회담, 남북장관급 및 장성급 회담에 대한 북한 군부의 입장을 타진하는 좋은 계기이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서해에서 발생하는 우발사태 관리를 위한 해공군 부대의 핫라인 설치, 양국 해군간 탐색구조 훈련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에는 북한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양군구 사령관과 해공군 사령관 등 군관련 인사 18명이 수행하였다.

베이징 한·중 외무장관회담(6.26)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미사일 시험발사(7.5)를 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미사일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비난 입장을 표명(7.16)한 것은 한·중 양국 외무장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무력제재 등은 6자회담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핵실험(10.9)을 감행하자 사태는 심각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이 크게 노출되었다. 중국외교부는 대

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 무력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10.12)하였으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실행이 가시화되는 듯하였다. 이 와중에 한국은 중국과의 공동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한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외교 및 경제제재가 더욱 확대될 경우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6자회담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베이징을 실무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10.13)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6자회담에서 해결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에 있어 대북 원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10.24).

하노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11.17)을 갖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표명(10.31)된 상태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양국 정상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이 북·미·중 3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실현시킨 데 환영을 표시하고 중국의 역할을 지지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희망하였다. 양국 정상은 향후의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2005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중 정상은 북·미간 직접대화가 빨리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이 특별한 지위를 활용하여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중 정상은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6년은 한·중 경제협력이 2005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나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가 나타나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하였다. 양국 경제협력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 교역은 2005년에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2006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2대 수입국으로, 또한 한국은 중국의 5대 수출국이며 2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도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였다. 중국정부가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하(9.15)하고 이어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 수출세 인상 조치(11.22)를 단행함으로써 향후 수출규제 대상품목이 노동집약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2006년도는 전년보다도 낮은 약 20% 정도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부품·반제품의 중간재 79.7%, 자본재 16.2%, 소비재 3.8%로 부품·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셋째, 2005년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상호 연구하기로 협의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은 한국에 FTA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5.26)을 갖고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완료되면 정부 간 협상을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은 민간연구 결과가 8월 경에 나오면 이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임을 중국측에 표명하였다. 한국

은 한·중 FTA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한·중 FTA를 적극 제안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을 견제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에서 북·미 협상이 진척되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6자회담 진전 조건으로 파악하여 북한의 핵동결에 따른 6자회담 참여국들의 대북 경제지원 이행을 도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의 중재 역할을 지지하는 한편, 중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내심으로 북핵문제가 북경올림픽(2008.8) 대회 이전에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희망할 것이나, 북한이 이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주도의 PSI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나, 중국은 북한의 재핵 실험이나 핵물질·핵관련 기술과 부품의 해외 이전 등 상황 악화시 PSI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무력제재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PSI 참여로 인해 한·중 양국은 갈등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 양국은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관계를 긴장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경협관련, 양국 간 교역액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중국이 수출 규제품목을 섬유, 신발, 피혁 제품 등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커 이들 상품의 대중 수출에 차질이 클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대중 공장이전 자체 역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재중 한국 업체들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 부과로 약 20% 이상의 원가부담이 있으며, 이로 인

해 대중 가공무역이 점차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혜택으로 저가 중국 상품의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논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춘흠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한·일관계

한·일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2006년에 접어들어서도 냉랭한 관계는 지속되었다. 한국의 대일 강경 비판도 계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고 합당한 실천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나는 일·한 우호론자이다. 전후 60년, 일본이 걸어 온 길을 봐주시고 앞으로 일·한 우호에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대표 초청 만찬(4.18)에서도 해저수로탐사문제와 관련, 대일 비판을 강도있게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저수로탐사문제’를 EEZ 문제 이상의 기점에 관한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하였고, 나아가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 문제로 보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고이즈미 정권의 국수주의적 성향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비판은 마침내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4·25)으로 나타났다. ‘한·일관계에 대한 대국민 서

신'(2005. 3)에 이어 소위 '4·25 독도 담화'가 발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담화'에서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언급하면서 역사인식 문제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조용한 외교'가 아닌 정면으로 다루어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함께 정면으로 다루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조용한 외교'의 폐기를 천명한 '독도 담화'는 '신 대일 독트린'의 천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독도 담화'에 대해 일본도 즉각 반응을 나타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독도 담화' 직후, 독도 관련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자민당은 '독도 담화'를 국내용으로 평가절하 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한층 경색되고 극심한 냉각상태가 지속되었고, 고이즈미 총리의 8·15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중 등의 비판, 일본 국내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한·중 등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야스쿠니 신사에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냉각되어 가는데, 일본 국내에서도 미국에 너무 편중된 고이즈미 외교를 비판하며 동아시아 외교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의 야당, 언론계, 재계, 학계 등은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과제로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강조하였고, 따라서 미·일 동맹외교와 동아시아외교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포스트 고이즈

미 정권의 핵심 외교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유력한 고이즈미 총리의 후계자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아베 관방장관은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여 역사 인식에 있어서 애매 모호함으로 일관하였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성 모호성을 나타내었다. 아베 관방장관은 총재 경선 과정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다니가키 사다카즈 후보와의 논쟁에서 주변국에 대한 침략을 반성한 1995년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명백히 하기도 하였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9.22)에 의하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아베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한·중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합의문을 연립정권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중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관계 개선을 주장해 온 공명당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가 퇴진하게 되면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아베 후보가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475표(각각 339표, 136표)를 획득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되면서,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아베 총리에게 취임(9.26) 축전을 보냈고, 아베 총리는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에 만나 한·일 관계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10.9)되었고, 양국 정상은 역사인식,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공동대응, 노무현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 방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반기문 외무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지원하였

다. 이로써 양국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노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인식의 차이로 냉랭했던 고이즈미 총리와와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아베 총리와 30여 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국 정상은 서로 ‘할말은 분명히 하면서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2006년의 한·일관계는 아베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냉각기를 벗어나 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한·일관계에는 여전히 감정과 이성이 얽혀있고 역사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잠재적 갈등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요인들이 2007년에도 다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배정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관계

한·러 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러시아 총리의 방한, 양국 외무장관의 회동, 러시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지지 등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직후 후속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였고,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회복 추세에 따라서 철도연결과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런던 국제회담(1.31), 반기문 장관의 실무 방러(4.10) 등을 통해 북핵 및 국제정치 문제, 양국 관계, 신임 유엔 사무총장 선출 건 등을 논의하

였다. 러시아 정부는 관행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의 아시아지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반기문 장관이 신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10.13)되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하였다. 반기문 장관의 방러(11.1)시 푸틴 대통령은 그의 선출에 만족을 표시하였고 유엔 역할의 강화를 희망하였다.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가 방한(10.17)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하고 북핵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부산 APEC 정상회의(2005.11)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경제·통상 협력 관련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명숙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에너지·석유화학·최첨단 기술분야 등의 협력 강화 방안, 대규모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군사기술 분야의 협력 계속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러 가스산업협력 협정」,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에 관한 협정」,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 면제협정」,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간의 교역 투자촉진 양해각서」, 「양국 산림청간 협력 양해각서」가 서명되었다.

하노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11.19)을 갖고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북한에 대한 압력과 대화를 동시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규모의 비약적 신장에 만족을 표시하고 자원·에너지·우주항공·IT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기업인 복수사증 발급 협정의 조속한 체결, 고려인 재정착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안보·군사 면에서 야쿠보프 러시아 극동군관구사령관 일행이 김병관 제1야전군사령관의 초청을 받아 방한(6.18~22)하였다.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 예방 후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러 양국 간

군사교류 및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7.5)와 핵실험 직후(10.10)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행동을 한반도 상황, 지역평화와 안정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양자 간 및 유엔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10.16)에서 북한 핵실험 후속대책과 관련, “핵실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착상태의 타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프라드코프 총리를 접견(10.17)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같은 압박과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대화재개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러 양국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엔결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평화적 해결 및 긴밀한 공조에 합의(10.17)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북핵 관련 공조 차원에서 북한지역의 대기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경제면에서 한·러 양국 간에 활발한 인사교류와 다양한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에는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60%, 한국 컨소시엄이 40%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주)」, 「GS 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금호석유화학」, 「현대종합상사」 등 7개 기업으로 확정(2.14)되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영삼 북한 철도상 및 야쿠닌 「러시아국영철도회사」 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사실상 3국 철도대표간 첫 회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러 철도운영자 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3.17)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진-하산 간 철도 현대화 개량,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노선문제, 북한철도의 현대화 개량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 등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현안들이 논의되었고, 『한·러 철도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야쿠닌 사장은 비공식 방한(7.19~21)하여 북한과 러시아가 개보수를 추진 중인 북한 나진항과 나진-TSR 노선의 활용방안, 『한·러 철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게르만 그레프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의 초청을 받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4.2~5)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경제특구 설명회와 한·러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우리측의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건의하였다. 한국의 동춘해운, 중국의 지린성 훈춘시 정부, 러시아 베르쿠트사, 일본의 『환일본해경제연구소』는 창춘시에서 모임을 갖고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훈춘항-러시아 자루비노 항-속초항-일본 니카다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운송로의 2007년 초 개통에 합의(9.2)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물자를 육로를 통해 다롄항으로 운반한 뒤 다시 배로 일본으로 수송해왔지만 새로운 해상운송로의 개통으로 12일 걸리던 운송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10월 초 러시아 국영전력회사인 ‘통합에너지시스템(UES)’ 극동지부는 한국측 제안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남북한으로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1월까지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지내며

러시아의 대북 창구 역할을 맡아왔던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국가기술 감독청장이 한국을 방문(10.11~17)하였다. 그는 12개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서 개최(10.12)된 제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러시아측 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하여 통상, 에너지, 정보통신, 우주기술, 어업, 교통 등 10개 경제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프라드코프 총리의 방한 일정까지 수행하였다.

이외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외교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하는 제7차 「한·러 포럼」이 모스크바에서 개최(3.27~28)되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및 안정 확보, 무역·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 문화 및 인도적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려인 4세로 2003년 총선에서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구에서 여당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당선된 장 류보미르(47세)가 11월 중순 연방하원인 국가두마 국제관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07년 한·러 양국은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고 러시아는 국제문제에서 유엔 역할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어, 특히 유엔에서의 한·러 외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대화와 압력’의 병행 추진을 통해 6자회담 등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회복 추세와 삶의 질 개선 정책에 따라서 교역이 증대하고 러시아 정부의 투자협력 요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II

북한정세

1. 대내 정세

가. 정치동향

2006년 북한정치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따른 경제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위상에는 큰 변동없이 오히려 핵실험이라는 강경수단을 통해 김정일의 위상이 제고되는 모습이였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7.5), 핵실험(10.9)을 통해 김정일의 ‘통 큰’ 모습을 보여주었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과 당·군 고위 간부 등 10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민대회(10.20)를 가진데 이어 평안남도·자강도·강원도 등지에서 군·민대회를 통해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난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반열에 올려놓으려했다는 점 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즉,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및 ‘민족의 태양’으로, 김정일을 ‘21세기 태양’으로 자리매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지킨 것으로 전제하고 2007년부터는 경제문제에 매진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트·ㄷ’결성 80돌(10.17)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당·군·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10.16)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앙보고대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결정된 가운데 1996년(70돌)에 이어 10년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대한 비난없이 김일성의 ‘트·ㄷ 동맹’ 결성

의 역사적 의미평가와 함께 김정일에 의해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4·25 문화회관에서 당·정 및 농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농업대회(1.25)를 진행했다. 1971년 1월 처음으로 열린 농업대회는 1994년 이후 12만에 열렸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농업부문’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1.1, 신년공동사설)하고, 농업증산에 온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였다. 올해 전국농업대회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영농기를 앞두고 개최되었다는 점, 농업증산을 위해 노동력·영농물자의 우선적 동원과 함께 영농사업의 과학화 및 농업구조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다.

북한은 3대혁명붉은기운동 30년을 맞아 이 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최고 수준의 대중운동임을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선군혁명구현을 위한 대중적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독려했다. 특히 2006년 개최된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는 1986년 제1차 선구자대회(1986.11.18~23) 및 1995년 제2차 선구자대회(1995.11.29~30)이후 10여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대회 개최의 사전예고, 생일상 전달, 관련동향의 수시 보도 등 대회관련 동향을 비중 있게 다룬 가운데, 선군시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당적 사업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회 개최는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이 운동의 산물로 집중 부각시키므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주도해 온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 김정일 중심의 체제안정 및 내부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적 내부동원을 극대화하여 농업증산, 인민경제 개건·현대화 등 2006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주요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10월에 열린 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도 주목되는 행사 이었다. 특히 이 행사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군 대대장·대대정치 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10.6, 중방).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축하 및 기념촬영을 통하여 당의 영도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촉구하면서, 정치·군사 이원화 체제에서 비롯되는 정치군관과 일반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군의 결속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는 림동옥 통일전선부장, 계응태 당비서, 백학림 차수 등 북의 고위 간부들이 사망했다. 림동옥 통일전선부장(8.20 사망)은 2003년 사망한 김용순 대남담당비서를 대신해 대남사업을 총괄해온 인물로서 오랫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인물이었다. 림 부장은 1970년대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한 이래 1979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4년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1990년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1993년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2002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2006년 초부터 통일전선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 업무를 주도해왔다.

계응태 당비서 겸 정치국위원(11.23 사망)은 1.5세대로 해방 후부터 당생활을 시작해 김정일위원장의 후계체제 수립과 강화를 뒷받침해온 당 간부였다. 그는 평안남도 평안 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1957), 외무성 부상(1960), 무역성 부상(1962), 당 중앙위 위원(1970), 당 정치국 후보위원(1981), 정무원 부총리(1982) 등을 거쳐 1985년부터 당 중앙위 공안담당 비서를 맡아 왔다.

백학림 차수(10.5 사망)는 87세로서 혁명1세대이다. 그는 일제식민지

통치시기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부대에서 전령병(연락병)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5년부터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전신) 부장에 임명된 뒤 2003년까지 오랫동안 인민보안성의 수장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했다. 또 노동당 중앙위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으로 활동했으며 공화국 2중영웅, 노력영웅, 김일성 훈장 등 북한 최고의 칭호와 훈장을 모두 받았다.

승진인사 중에서는 단연 최룡해 신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가 주목된다. 최룡해 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제1비서가 올해 초 로 배권의 후임으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998년 ‘청년동맹 비리사건’으로 해임된 뒤 2000년대 초 평양시 상하수도관리소 당비서로 복귀했다가 2003년 노동당 총무부 부부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최룡해 책임비서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절친한 항일빨치산 동료로 1982년 사망한 최 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왔다. 2001년 최원의 당책임비서 사망 후에 공석으로 있던 강원도당 책임비서에는 리철봉 철도성 정치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12.6 현재)은 총 93회이며, 이중 군 관련 66회, 경제 12회, 대외 7회, 기타 8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김정일 위원장의 총 공개활동이 131회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광복 60주년, 6·15 5주년 등 주요 행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5년 35회 → 1998년 70회 → 2000년 73회 → 2002년 99회 → 2004년 92회 → 2005년 131회 등으로 공개 활동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전체 공개 활동의 절반 이상을 군관련 활동에 치중해

군 전술태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내외에 체제보위 의지 및 선군정치를 시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과 관련해 군 관련 공개 활동의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수행인물로는 지난해 군부에서 이명수(43회), 현철해(43회), 박재경(44회), 당쪽에서 김기남(31회), 황병서(33회), 이재일(25회), 내각쪽에서 박봉주(29회), 강석주(20회) 등이 자주 수행했는데, 올해도 군쪽 인물에서는 변동이 거의 없으며, 다만 당쪽에서는 현업에 복귀한 장성택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수행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 북한 정치정세는 김정일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김정일’ 논리가 강화되면서 김정일이 ‘후대수령’으로서 ‘21세기 태양’이 되는 자리매김 행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계구도의 가시화와 함께 북핵문제가 잘 풀린다면 7차 당대회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핵보유를 통해 미국과의 안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인민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개방의 폭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은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하다면 ‘6자회담 대타결’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현준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동향

북한은 2006년 신년사(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를 통해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온 나라가 떨쳐나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

나 북한은 올해 역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사일 발사(7.5)와 핵실험(10.9)으로 남한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맞게 될 2006~2007년은 북한에게 더 없이 잔인한 겨울이 될 것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1.10~18)과 장성택 부부장(3.18~28)의 선전, 광조우 등 중국 경제특구방문은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의지로 받아들여져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와 같은 기대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로 더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 북한은 2006년 전반을 통해 이렇다 할 경제개혁·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에게는 중국식 개혁·개방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더 선호한 한 해이었다.

2006년 초 북한은 10년 만에 기간공업·농업 등 경제분야의 중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목을 받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공업 및 농업 3년 연속계획’을 수행할 것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조선신보』, 1.13). ‘3년 연속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수준을 재현하는 것이 목표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지하듯 1987년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했으나 1993년 12월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이 계획의 목표가 미달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이후 3년간(1994~199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라는 경제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90년대 중반 들어 자연재해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 중장기 계획을 중도포기하고 1년 까지 단기계획을 세워 먹는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10년 만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경제문제를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발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1.26)를 열어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수립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 내각과 도 인민위원회에서 농기계와 부속품, 영농물자 등 농업에 모든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종자혁명과 감자농사, 두벌농사, 콩농사 등 지난해 주력하던 분야를 이어가면서 소나 염소 등 초식가축의 사육에도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제시했다. 공업분야에서는 경제의 피와 영양소 역할을 하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물류난 극복을 위해 철도운수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공업 활성화를 위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 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었다.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대화에 대한 우선 투자를 강조,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도 밝혔다.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북한 경제는 예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송, 전자공업, 경공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했으나 이마저 예년에 비행 수행률은 둔화되었다. 기계·금속·화학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실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생산실적이 부진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공장·기업소는 총 46개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2006년 부문별 공장·기업소 상반기 계획완수 추이
(단위: 개, %)

| 구 분 | 에너지 | 중공업 | 경공업 | 광업 | 기타 | 계 |
|------|--------------|--------------|--------------|--------------|--------------|----------------|
| 2004 | 18 (26.9) | 13 (19.4) | 26 (38.8) | 8 (11.9) | 2 (3.0) | 67 (100.0) |
| 2005 | 18 (17.3) | 21 (20.1) | 27 (26) | 23 (22.1) | 15 (14.4) | 104 (100.0) |
| 2006 | 8 (17.4) | 8 (17.4) | 19 (41.3) | 8 (17.4) | 3 (6.5) | 46 (100.0) |

자료: '06.5.1~8.15 북한보도 종합(통일부)

부분별로는 전자공업을 비롯, 운송 및 경공업 부문에서 계획을 달성(100.4%)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석탄, 전력 등 에너지분야는 일부 발전소·연합기업소만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전자공업 등 일부 부문의 실적이 양호한 것은 북한이 중점과업으로 추진한 공장 개건 및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북·중간 교역에 따른 운송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2006년 북한 경제는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한 해로 특징 지워진다. 먼저 2000년 이후 5년간 북·중 무역은 매년 30% 이상 증가했다. 북·중 무역 증가분은 전체 북한 무역 증가분의 77%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3.5%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중국이 북한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북·중 교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크다. 2006년 상반기 북·중 교역은 7.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의 증가(수출은 2.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6% 감소한 반면, 수입은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에 그쳤으

나, 북한 교역량의 55%, 원유 100%를 중국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5년 대북 투자는 현재 약 1억 달러 정도에 달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료의 7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시장에서 최근 거래되는 물품의 80%가 중국산이다. 북한의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국가상점망이 와해되면서 과거 무역에 종사하지 않던 기업과 기관들이 대중무역에 나서고 있는 것이 북·중 무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투자와 관련, 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북한을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재 공급처로 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도 7·1조치에 따른 생산력 확보를 위해 해외자본과 기술유치 대상국으로 중국이 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생활필수품 생산과 광산개발 등을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에 부딪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주요 대북 경제협력분야는 지하자원, 목재 등 원자재 개발과 에너지, 항만,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사업권 확보 등이며, 북한의 저임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3월 토지개혁 법령 60돌을 기념하여, 농업부문의 기계화, 규격화 포전 조성 및 토지유실을 막기 위한 농토관리를 추진, 자력갱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자력갱생은 새 세기 요구에 맞게 현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으로 돼야 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북한)의 실정에 맞게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그 밖에 북한은 압록강 중류에 중국과 두 곳에 소형 수력발전소를 공동 건설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한편, 총연장 130여 km에 달하는 50여 개의 자연흐름식 수로를 완공하기도 했다. 대동강 상류지역에는 대각

청년발전소의 송전망 공사(120기의 철탑과 콘크리트 전주 부설)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상업분야에서는 은행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 자금 회전속도를 높이는가 하면, 소득을 기업경영 중심 지표로 삼기도 했다. “기관·기업소의 소득평가가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경영소득과 국민소득에 이바지한 정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면서 소득실적을 소득목표로 나누는 ‘소득실적평가’의 활용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에 성과급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북한은 금융분야에서도 서구식 신용거래와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동북아시아은행」이 현금카드를 발급, 봉사지점(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했다. 이 카드는 일정 액수를 충전시킨 뒤 식당이나 상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기능을 한다. 또한 각종 외화를 그 자체로 예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율과 특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자는 보통예금의 경우 연 1.5%이지만, 정기적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연 4%, 1년 연 6%, 2년 연 7%, 5년 연 8%로 다양하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와 평양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5.15)했으며, 브라질과는 「무역협정」을 체결(5.23)했다. 그 밖에 2006년 5월 ‘제9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했으며, 광고회사를 설립, 「조성광고회사」가 국제상품전람회에 주문·제작한 광고를 출품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에 투자하는 최초의 외국 펀드가 영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영국계 투자사인 「앵글로-사이노 캐피털」은 ‘조선개발투자펀드’를 설립, 최대 1억달러 규모의 투자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2007년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직결되어 전개될 것

이다. 2007년 전반에 걸쳐 북한 경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띠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경제적 측면의 대북 제재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시각에 따라 접근 및 대응방식이 갈라질 것이나,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일 것이다.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은 북·중 양국 계좌간의 입금과 송금을 제한한 데 이어, 중국에 있는 북한의 계좌동결 등 전면적인 금융봉쇄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중국의 대북 교역 종사자들이 대북 수출대금을 받는데 과거보다 3~4배 이상 시간이 걸릴 경우, 북·중 교역은 점점 활기를 잃을 것이 분명하다. 1,400km에 달하는 대북한 국경지역에서의 검색도 공식 무역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중국의 반관·반민 기업이 추진해왔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제재 중 가장 효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제재일 것이다. 정상적인 상업교역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송금할 수 없다면 북한의 수출업자가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럴 경우 현금을 동반하는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현지에서 수출대금을 받은 북한인은 본국 계좌에 송금할 수는 있어도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물품송장 등 자금출처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을 비롯, 심양과 단둥지역 은행들은 모두 북한을 외환거래 금지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북한 기관들은 규모가 큰 외화별이 회사들이다. 1~2만 달러씩 거래하는 조그만 회사는 소위 달러와 물건을 ‘맞교환’하지 은행거래는 하지 않고 있다. 당이나 인민군, 보위부 등이 운영하는 부강, 대흥, 대성과 금성공사 같은 회사들은 한 번에 몇 십만 달러씩 중국측과 은행을 통해 크게 거래한다. 그러나 은행거래가 끊기면 돈을 싸들고 다녀야 한다. 큰

거래는 불편해져 결국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정상적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고 입금할 외국금융회사 계좌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안정한 거래를 면치 못하게 된다. 북한으로부터 수출하는 회사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자연스럽게 거래를 줄이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단둥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의 80%가 거치는 관문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로 단둥세관이 40일씩이나 문을 닫는다면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지 않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다.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기는 하겠지만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권유를 따를 경우, 대북제재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되찾는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잃어버린 중국의 체면을 세우고 대북 영향력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대북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북한 경제는 보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지는 한편, 중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7년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도 대외경제에 편입하려는 의사와 입장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개혁 착수 시점에서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와 국제적 고립 등 불리한 여건에서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발휘할 수 있는 개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개혁의 질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에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확대가 대외개방에 상응하는 내부 개혁프로그램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2007년 북한은 대 주변국 관계개선을 통한 시장화로의 진입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가 만연한 경제적 파탄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김영운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사회동향

2006년 북한 사회는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이완과 사회변화가 지속되었으며 유례없는 집중호우, 핵실험이후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한 생활고 가중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한 해이었다.

경제난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였다. 경제난으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하여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한 버스 충돌사고와 열차 충돌사고가 잦았다. 양덕-고원 사이 부래산 역전 부근에서 기관차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대형 열차 충돌사고(4.23)가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회령-청진간 버스 사고(5.25)가 발생하여 71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양덕-고원 구간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화물 열차가 전복(7.1)되어 3일간 열차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온성-회령간 통근 열차의 기관차의 전동기 고장으로 운행이 두 달간 중

단되었다가 운행이 재개(5.21)되는 등 경제난의 파괴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제난은 북한의 열차운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석탄이 없어서 증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기관차로 교체하였으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운행에 차질이 심하다. 또한 기관차 부족, 화차 부족, 전기부족, 선로 불량, 낙후된 통신시설 등으로 총체적 노후현상과 물자 부족 현상이 노정되었다.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나서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민심을 불안하게 하였다. 집중호우(7.14~16)로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지역에 걸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번 수해로 북한에서는 역사상 최대 피해로 기록된 1967년의 1만 7천여 명 사상자보다 무려 3배가 넘는 5만 5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재민은 250여 만 명, 농경지 유실 및 침수는 최대 곡창지 중 하나인 황해도를 포함해 수십 만 정보에 이른다.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은 대동강 상류지역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약 3만 여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피해가 심한 양덕군은 양덕-고원 사이의 지수역, 양덕역, 내동역 구간의 50여 리에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과 철길, 도로가 많이 파괴되었다.

경제난으로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소학교,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교육설비, 실험기자재, 실습 조건 등이 갖춰지지 못해 학과 공부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숙식난이다. 학생들의 일탈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다녀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과서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며 끼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등의 경제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이직하여 과외지도를 하거나 장사로 전업하는 경향도 있다. 2,000~2,500원 남짓 되는 교원 월급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800~900원 정도 손에 쥘 수 있는데, 이

는 식량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이다. 부업으로 잘사는 집이나 간부 자녀들에 대한 개인 교습이 성행하고 있다.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풍금이나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당에서는 이러한 개인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사직을 사퇴하고 개인교습을 하거나 장사로 전업하는 경향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서 ‘돈 = 능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이는 시장요소 확산에 따른 현상으로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 소통과 흐름에 있어 혁신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간부들의 요구로 뇌물이 증가하고 있다. 돈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일군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국경 세관통과, 기차표 구매 등에서도 뇌물이 작용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절도가 많아서 일반주민들이 주택담장에 철창을 설치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식량과 가축에 대한 절도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인재산에 대한 소유의식도 증가했으며, 시장에서도 절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폭행 등 폭력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절감, 짜증이 많아 이웃사람끼리, 직장동료끼리 공격적 행위가 증가, 폭행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도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약 1,700여 건에 달했으며, 금년도 3월 한 달 동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만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매매업도 성행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대기 숙박소, 신부방 등

을 운용하면서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마약을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 판매자, 마약판매자의 자녀, 마약 통제하는 법 일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간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과 국내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쉽게 마약에 노출되는 자녀들의 마약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함경북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500여 건인데 이중 무려 30%가 마약사용자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마약사용이 확산되자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마약금지에 관한 포고령」(3.1)이 나온 후에도 마약거래가 없어지지 않자, 북한 당국은 6월 말부터 집중수색을 하여 제조업자를 잡아들이고 그들과 거래하던 청진, 회령, 라진, 무산, 혜산의 밀수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남한 CD 및 DVD를 보는 사람이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도 지속되고 있다. 남쪽 뉴스를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단위에서 인터넷 활용이 확대되어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기사장 및 지배인 등경제부문 간부의 세대교체가 확대되고 있다. 정보산업 및 과학기술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대거 새로운 기업소 간부로 부상하고 있다. 사상이념보다는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한번 지배인에 임용되면 10~30년씩 장기근속했으나 최근에는 실적 위주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남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상품이 유입되고 더욱 많은 남한사람과 중국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관심과 정보에 대한 욕구, 체제변화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있다. 금년 5월에 열렸던 제9차 평양상품전람회에 북한 주민 4만 명이 3일간 참관하고 상품도 구입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직접 표출되는 사건도 발행하였다. 11월 하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시장 이용시간 제한에 대하여 주민들이 당국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주민과 당국의 충돌 과정에 여성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구속되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정치선전 홍보에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오리, 물고기, 닭공장, 자전거 등을 TV나 신문에서 획기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들을 볼 수도 없고,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매할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절대적인 공핍 외에도 북한 당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사회불만, 일탈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조선에는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는 은어가 있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가 뒤따른다. 작년 10월부터 유동인구를 통제하고 시장요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곡물전매제 또는 배급제 재개를 실시했으나 곡물확보량 부족과 시장요소의 확산으로 유명무실해졌다. 경제난으로 해이해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배급제를 부활함으로써 주민들의 사회이동과 의식변화를 통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식량부족으로 배급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당국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사회통제 목적으로 시도하는 시장통제 등의 정책은 대부분이 별 실효성이 없고 곡물전매제의 실시가 무위에 그치자 북한당국은 쌀 매매를 묵인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이동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7월 이후 각 도·시·군 2부(증명서 발급부서)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증명서 취급을 하지 말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증명서 제한조치는 철도의 기본선이 마비되는 등 열차운행이 중단된 이유도 있지만, 수해로 생긴 이재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피해 관련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있다. 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치적 동원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를 개최(2.23~24)하여 김정일 중심의 체제안정 및 내부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적 내부동원을 극대화하여 농업증산, 인민경제 개선·현대화 등 올해 공동사실에서 제시된 주요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제96회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 기념 중앙보고회를 개최(3.8)하여 “김정숙 동지의 모범을 따라 수령결사 옹위를 통해 참된 여성혁명가, 선군혁명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성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 가정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미풍양속을 적극 살려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미 ‘셔먼호 격침일’(1866.9.2) 140주년을 맞아 평양시 군중집회를 개최(9.2)하여 “반미성전을 세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집회는 ‘미 셔먼호 격침일’ 관련 보고회(1991.9) 이후 15년 만에 다시 개최된 것으로서 미사일 발사이후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트·ㄷ’ 결성 80돌(10.17)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당·군·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결정된 가운데 1996년(70돌)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핵실험은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과 핵전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미정서 고취에 주력하였다.

또한 핵실험 성공 환영 평양시 군민 대회(10.20)와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각 도 군민대회를 연일 진행하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게 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에 맞서 국가의 최고이익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결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부통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나온 이튿날부터 인민무력부, 민방위부 산하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교도대, 로농적위대 등 민간무력까지 비상소집 훈련과 진지차지 훈련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 포들은 포탄장약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들로 구성된 로농적위대와 교도대도 모두 군복을 착용하고, 자동차는 앞 유리만 겨우 보이게 내놓고는 위장망과 벗짚, 소나무 등으로 위장하고 다니며 전시 비상사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2007년 북한 사회는 지난해의 변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난이 해소될 전망이 없으며, 핵문제 해결의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경제난에 기인한 사회변화, 주민들의 의식변화, 사회질서의 이완 등은 지속될 것이다. 당국의 사회통제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선군사상과 반미주의 등 통치이데올로기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체제통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 위폐문제로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북한은 반미주의 구호를 내부체제 단속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 사회의 각 부문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사회기강이 흐트러지는 사건·사고들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요소가 활성화되면서 당국의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맥주집, 식당 등의 서비스업이 증가되어 북한사회내의 사람 대 사람간의 정보소통이 확산될 것이다. 외부로부터 CD, DVD 등의 유입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지속될 것이다. 경제난 속에서 전개되던 민심 이반 현상이 외부의 정보유입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식량난이 지속될수록 당일꾼, 보위부, 안전부 성원들의 뇌물 받기가 더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통제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 서재진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군사동향

2006년에도 북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선군 이데올로기 강조와 선군정치활동의 확대를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의 정통성을 공고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선군혁명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인민군대가 북한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선전하였다. 특히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최고 사령관(김정일)의 ‘제일결사대’, ‘제일충폭탄’이라는 점을 반복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인민군대의 충성을 인위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은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강화’ 등의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인민군대가 김정일 정권의 보위를 위한 일사불란한 충성조직으로 남아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6년도에도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상부에서 하부단위 군부대까지 직접 시찰하여 위로부터 아래까지 손수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군사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선군정치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정통성 확보와 인민군대의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동시에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 독려를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여전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 훈련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태세를 견지하기도 하였다. 당의 훈련 제일주의 방침 하에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를 구비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군사적 슬로건을 반복해 온 것이 그것이다. 군민(인민대중)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었다. 즉 인민군대는 사회의 본보기(모범)로 사회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군인품성’을 적극 본받도록 독려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 당국은 선군정치에 근거하여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실제로 포착된바 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 및 지대함, 지대지 유도탄의 성능을 개량한다든가 장사정포 포탄의 성능을 개량하고 잠수함을 건조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07년도에 북한은 그들의 핵보유 사실을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핵보유에 근거한 ‘군사논리’가 지배하게 됨에 따라 대남관계뿐만 아니라 대외, 특히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핵보유에 기초한 선군정치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수세적으로 보다는 공세적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군사력을 강화

하는 정책 역시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부 군사동원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이를 체제안정화를 위해서 활용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적 공세태세 유지 노력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전국적인 공습훈련 실시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훈련도 강화될 것이다. 핵문제 관련, 남북 양측의 민족공조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확대할 것이다.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명령 전군 하달, ‘전시동원령’ 발동 등을 통해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성공은 북한이 정전협정 하의 군사분계선에서 호전성을 심화시키는 군사 전략적 과감성을 띠도록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과감한 군사적 조치는 한·미가 제한적이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제한전쟁’ 개념에 기초한다. ‘제한전쟁’이라는 개념은 약소국(북한)이 강대국(미국 등)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강대국은 ‘핵확전’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군사적 응징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도발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데 보다 큰 과감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군이 정전협정 의무이행을 포기한다든가, 서해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도발행위를 자행하여 NLL의 무실화를 노린다든가,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월선의 빈도를 높여 군사분계선을 무시함으로써 군사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든가,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군사적 돌출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남북대화 전략전술 차원에서 남북 군사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군 축차원에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미국과 관련된 요구를 쏟아냄으로써 반미 분위기 확대를 꾀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핵배치 여부(주한미군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대해서 성토함으로서 북·미 핵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주요 대외 관계

가. 북·미관계

2006년도 한 해 동안의 북·미관계는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및 북·미 양자협의(10.28~29)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호 공방만을 주고받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를 시험 발사하고 그에 대해 미·일 등이 주도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 169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었다. 북·미 간 갈등은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10.3)하고 핵실험을 강행(10.9)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작성·채택을 주도하였으며,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다. 동 결의는 WMD와 관련 물자의 이전금지 이외에 재래식 중화기와 사치품의 이전금지, WMD 관련 인사 입국·경유 금지, WMD 화물에 대한 검색 및 관련 협력조치, WMD 관련 북한(인사, 단체) 자금·금융자산·경제자원 동결, 제재 위원회 설치 등 상당히 포괄적이며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이다. 특히 제재 위원회가 90일마다 유엔안보리에 제재 현황과 효율적 집행 방안을 보고하고, 회원국이 30일 이내 유엔안보리에 이행조치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제5차 1단계 6자회담(2005.11)이 잠시 열렸으나, 이미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미국의 '돈세탁 우려기관' 지정을 자신에 대한 금융제재로 규정하고, 그 철폐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은 BDA에 대한 조치와 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 아래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왔다. BDA의 북한계좌 동결문제와 관련 뉴욕에서 미·북 간 접촉(3.7)이 있었으나 북·미 간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북한이 대북 ‘금융제재’ 철폐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였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당 특사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지불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4.11)하였고, 플로렌지국 토안보부 정책담당차관보 대행과 사우어브레이(Ellen Sauerbrey) 국무부 인구·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탈북자의 미국 망명 프로그램의 가동을 증언(5.10)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김성민(4.28), 강철환 및 김한미 가족(6.13) 등 탈북자들을 백악관에서 접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졸릭(Robert Zoellick) 국무부 부장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위폐 제조와 마약에 의존해 살고 있는 불법 정권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증언(5.10)하였다.

북한의 달러화 위조·유통 및 돈세탁 등 불법 행위와 관련 미국은 7월 중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회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회사들도 포함시켰다. 스투어트 레비(Stuart Levey) 미 테러리즘·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은 같은 달 베트남·중·한·일 등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미국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2기 행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도둑정치’(kleptocracy)와의 전쟁을 선언

(8.10)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 추진을 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도둑정치’를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이며 국민의 장래를 도둑질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독재·압제 정권에 부패정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북한과 벨로루시를 대표적인 예로 지적하였다. 9월에 들어 조지프(Robert Joseph)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미국의 설득으로 예멘과 리비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북한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는 정책이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9.6). 폴슨(Henry M. Paulson, Jr.) 미 재무장관은 하노이 APEC 재무장관회의(9.7~8)에서 불법자금 조성 및 돈 세탁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9.7)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 북한측의 대응도 매우 완강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일방주의 외교정책 아래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 등으로 낙인찍고 무력과 핵 선제공격 위협을 통해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 공세적인 대응을 하는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 억제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외부 원인론’으로 자신의 핵무기 개발을 변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2006년 연초부터 강화된 대미 비난으로 나타났는데, 『로동신문』은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파탄시켰으며 그에 따라 6자회담이 결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16, 1.17). 이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1.21)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니, 위조지폐니 하며 범죄국가, 위협국가의 모자를 씌우려 한다”며 “이것은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1.25).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며,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회담(11.18)의 장에서도 이어졌다. BDA의 북한 계좌 동결조치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그 원인이 되었으나, 북한은 그 조치를 6자회담에 1년 이상 복구하지 않는 이유로 삼은 것이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7.5)를 강행하여 6자회담 재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나,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7.15)에 대해서 외무성 성명(7.16)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었다”며 핵실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10.3)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10.9)을 단행했다. 리철 스위스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총회 연설(10.16)에서 역시 “미국의 핵 위협, 제재, 압력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조선은 다시금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핵 실험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변명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더욱 위협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게 내주게 된 부시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시아 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베이징 미·북 양자 회동(10.31) 결과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복귀하기로 하였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미 간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발표(11.1)했다. 미국의 힐(Christopher R. Hill) 국무부 차관보는 11월 말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 회동을 가지고, 5MW 원자로 등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신고, 핵실험 시설의 폐쇄 등 북핵 폐기를 향한 북한측의 ‘조기 이행조치’와 에너지·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등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제안했고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12.18~22)가 열리게 됐다.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과거의 회담에서와는 달리 6자회담 틀 속에서도 북·미 간 양자 접촉·협상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졌고, BDA 관련 문제도 북·미 간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다루어졌다. 양국은 미국이 제시한 초기조치 이행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BDA문제에 가로막혀 합의에 실패했다.

2007년에도 북한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핵카드를 계속 활용하면서 현재 조성된 국제적인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 또는 탈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6자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면, 북·미관계는 갈등적 상황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국제적인 이행을 강조하면서 PSI의 확대 시행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을 계속 선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세적 맞받아치기’ 전략을 견지할 것이다. 다만, 2008년 하계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미 간 갈등 상황의 지속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북·미관계는 갈등상황의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는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체제유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 ‘버티기’와 협상을 반복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반제국주의’ 즉, 미국과의 투쟁을 체제유지의 핵심적인 논리

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미국측과 북한측이 갈등 상황의 계속적 유지가 각각의 이해관계에 더 큰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이거나 타협을 시도할 경우, 6자회담은 일단 추진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북·미관계도 어느 정도는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초기 이행조치’를 북한이 단계적으로나마 이행하겠다는 방향에서 북·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 동결과 IAEA의 사찰 등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이 시작될 것이다. 6자회담이 계속 추진력을 받게 되면, ‘9·19 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포럼이 구성·가동될 수 있을 것이고, 북·미 양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고위급의 정치회담 또는 실무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측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북핵문제를 완전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며, 이에 대해 북한측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여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의사를 보여준다면 향후 양자관계는 1994년 제네바합의를 근거로 약속되었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북정책조정관을 겸직하고 있는 힐 차관보나 그 이상 수준의 고위급 인사 또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북한측 고위급 인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북·미 간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은 북한측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6자회담에서 일단의 표면적인 성과를 보

여주고 미국측의 호응을 유발하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성사가 될 수도 있다.

- 박영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북·중관계

북·중 정상회담과 5차에 걸친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진척이 거의 없었다. 북핵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1.10~18)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1.17)하였다. 당시 순조로운 북핵문제 해결과 원만한 북·중관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북·중 관계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평양 정상회담(2005.10.30)의 합의인 양국간 ‘전통의 공고화, 상호신뢰의 강화, 호혜협력의 확대’를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정일 역시 후진타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위폐문제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한반도비핵화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었다. 이러한 양국 정상간의 협의 내용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방중시 리자오싱 외교부장과의 회담(6.1)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백남순 외무상은 북한이 향후 중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상호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와 중국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핵실험(10.9)으로 중국의 대북 외교는 실패에 직면하였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한·미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반대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무력제재를 제외한 외교 및 경제 제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0.12).

중국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경제 및 무력 제재 등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적용코자하는 데 반대하여 무력제재가 제외된 7장 41조만의 적용에 찬성하였다. 왕광야(王光亞) 주유엔 대사는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단호하고 건설적이며,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10.12)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만 하면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동시에 표명하였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금융제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10.10).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선전포고’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2차 핵실험을 의미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북한에 표명(10.12)하였다.

중국은 대북 금융거래와 투자 사업을 잠정 중단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북·중 변경무역을 공식적으로 중단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지속하였다. 중국은 자국 변경 내에서 발생하고 1718호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국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에 정박하는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화물을 검색하였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가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대북제재의 성격과 시한을 정하여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 명분을 제공하는 대북 협상도 진행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10.18~19)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북·미와의 3자회담을 주선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참여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완화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중국 중재외교의 성과이었다.

경제면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북·중 경제협력이 증진되면 될수록 북한의 개혁과 개방 의지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북 경험 확대를 표방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생존을 유지하고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확대하여 대북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6자회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험이 가장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중 경험 확대를 추진해 나갔다. 북·중 경험확대의 이정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1.10~18)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개혁·개방과 대중국 경제협력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였고 교역, 투자, 지원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북·중 합영사료공장이 평양에서 정식 생산(4.10)에 들어갔으며, 중국 남방항공이 평양-베이징 노선 주3회 운항을 재개(4.26)하였다. 양국은 평양에서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7.11)하여 「북·중 투자보호협정」(2005.3)에 이어 양국 간 투자와 기술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축소되기 시작하여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북·중 교역관련, 2005년 16억 달러에 달하였던 북·중 교역액은 2006년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교역액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어 2005년도 수준에 훨씬 미치지 않고 있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중국은 북한의 제1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누계는 2006년도 상반기까지 44개 항목에 합의 액은 21,935만 달러, 실제 투자액은 12,722만 달러였고, 그 중 대부분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중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 민영기업들의 대북 투자 마인드는 사실상 동결되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당장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결의안에 찬성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 민영기업들은 대북 투자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기업의 대북 신규 투자는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2006년도에도 중국은 2005년도 수준과 같이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북한에 하였는데, 원유는 약 50만 톤, 인도적 차원의 식량은 약 4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중국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북 원유 및 식량 지원을 지속할 뜻을 표명(10.24)하였다. 중국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북 송유를 지속하고 있으나 교역차원의 대북 송유는 감소된 양으로 수출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이후 6자회담(12.18~22)에 복귀하였으나 BDA문제로 6자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미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중국이 미국의 대북 무력제재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 시점을 정

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2007년도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북·중 양국은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긴장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함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이 지속되는 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북 무상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북 정상적인 경제교류, 교역, 경제지원이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지속할 것이나 그 규모는 서서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핵확산을 반대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동결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직접 대화 및 대북 금융제재와 유엔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중국은 6자회담의 성과가 극히 적을 것으로 중국은 예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권고를 표면적으로는 동의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핵 포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북·중 외교 및 군사안보 관계는 크게 악화되고 경제협력도 감소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은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이나, 식량지원은 2006년도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할 경우, 감소되었던 북·중 교역과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에너지 투자 및 채굴권 등을 거의 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춘흠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북·일관계

2006년에 접어들면서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임하게 되었다. 즉, 양국은 제13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3년 3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재개(2.4~7)하였다. 회담에서는 ① 납치문제, ② 과거사 청산문제, ③ 핵·미사일 문제 등 주요 현안이 3개 분과위원회에서 차례로 논의되었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최우선시하면서 3개 분과위원회를 상호연계·연동시키는 전략아래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했고, 북한은 과거사 청산문제를 중시하면서 임했다. 그러나 북·일 양측은 과거청산 방식, 납치 해결문제 등에서 이견만을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국교정상화 회담의 실패 직후,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협상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대북 전략의 모색과 수립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북·일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은 6월에 접어들면서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의 언론 인터뷰 허가, 요코다 무덤 및 생존 당시 거주지 공개, 요코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일본 언론인들의 평양 방문 허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포동 2호의 조립·완료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북·일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일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강한 경고와 더불어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동해쪽으로 대포동을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발사(7.5)함으로써, 북·일관계는 한층 냉각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사건으로 일본 열도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창하였고, 미국과 함께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비난 결의’ 채택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북한 계좌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9.19)를 취하였다. 이는 아베 신 정권(9.26)의 대북 정책이 강경노선을 취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 의도를 공식 발표(10.3)하자, 아베 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과 정보교환을 하도록 긴급훈령을 내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성명(10.6)을 적극 지지하였다.

중·일 정상회담(10.8)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10.9)을 위해 서울에 도착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 소식을 접하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내각에 내렸다.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과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 국제사회의 엄격한 조치, 양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유엔안보리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였다. 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2년 평양선언과 작년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역설하였다.

아베 총리는 귀국 직후 중의원 답변(10.11)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제재와 관련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은 같은 날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핵개발로 인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배증했다는 인식아래 북한 선박의 입항과 수입 전면 금지 등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일본은 금융제재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10.6)을 적극 지지한데 이어,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10.14)하자,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북 추가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사치품 24종을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11.14)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단행으로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일관계는 북·미관계나 6자회담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배정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관계

북·러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정치문제 보다는 주로 안보·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제면에서는 러시아의 대북 전력공급과 철도연결 문제가 협의되었고, 북한은 증가하는 석유 수입대금을 노동력 송출 확대로 갚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사장이 방북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7.22)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통과(7.16)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일 것

으로 추측되었다. 북한에 착공(2003.6)된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성삼위일체성당)이 완공되어 개원(8.13)하였다. 양국은 이 정교회가 북·러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년 동안 활동하였던 박의춘 주러 북한대사 후임으로 김영재 무역성 부상이 임명(9.14)되었다. 또한 카를로프 주북한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발레리 수히닌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가 임명되었다.

안보·군사 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7기를 시험발사(7.5)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박의춘 북한대사를 소환해 미사일 발사 유예의 계속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지역 평화와 안정에 반하고 핵위기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7.16)에 찬성하였다. 러시아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 핵문제에 관한 6자 회담에서 양보를 얻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러시아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10.9)하자,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김영재 신임 북한대사를 소환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일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준비함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 제재보다는 실용적 접근법과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세계식량계획」(WFP)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12,800톤의 곡물을 전달(10.11)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어 최악의 대결 시나리오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렉

세예프 6자회담 대표를 북한으로 파견(10.13)하였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10.14)이 어떠한 경제제재나 무력사용에 호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는 결의안을 ‘비편파적이고 균형잡힌’(unbiased and balanced) 것으로 평가하였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됐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10.21), 러시아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의 금융제재에 의한 북·미간 대치와 관련하여 좀 더 유연한 접근법을 양측에 요구(10.21)하였다. 북한이 미·중과의 베이징 3자회담(10.31)에서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러시아는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의 남북한·중국 방문과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강조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러시아는 향후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2001년부터 전기공급 협상을 벌여온 북·러 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30~50만kw 잉여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표류하고 남한의 200만kw 대북 송전계획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송전선 건설 등에 투자를 하면 이를 광물자원, 광산 개발권 보장 등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북한이 했기 때문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 사이에 370km 길이의 초고압(500kv) 직류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이 계획은 약 2억 달러 공사비와 3년의 공사기간이 예상되고 있다.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사장의 방북(7.19~20)시에는 김영삼 북한 철도상과 TSR-TKR 연결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양국은 나진-햇산 40km 구간

철도 현대화 작업을 연내 완료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 사무소장이 북·러 간 금융거래의 상당한 개연성을 주장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열려있는 마지막 금융피난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8.29). 그러나 『러시아중앙은행』측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막힌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에 10개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도(9.3)하였다. 『조선무역발전촉진위원회』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12.4)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건설과 목재가공, 원유, 가스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할린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북·러 경제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대러 부채가 러시아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현재 44억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대러 석유 수입액은 2001년 6만 2,000달러에서 2005년 44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대금을 갚지 못해 대규모 인력을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송출 규모를 2005년 3,320명에서 2006년 5,000명으로 확대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러 간의 전통적인 선린관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미·일의 견제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안보 후견국인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재 신임 주러 북한대사는 2002년부터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주로 중국 및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를 상대로 무역교섭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향후 북·러관계는 경제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의 경우 북한의 NPT 즉각 복귀, 북·미 양국의 우려사항 동시해소,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시 중유지원과 잠정적인 다자안전 보장,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부여 등의 기본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 양국의 경제적 이해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양국을 연결하는 철도의 현대화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대남동향

북한은 200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남관계 추진방향으로 '3대 애국운동'을 제시하였다. '3대 애국운동'은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1.26, 인민문화궁전)에서 2006년을 '3대 애국운동의 해'로 규정하고,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대표를 포함시키는 것과 남북대화·교류 증진 및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3가지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1972년부터 고수해 온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2005년에 새로 강조했던 '3대공조'(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를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애국운동'으로 확대·강화하려는 의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7.5) 및 핵실험(10.9) 등 대미 대결정책에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남 사업에서는 위축된 양상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당국대화와 관련, 북한은 장관급회담·군사회담·경제회담·6·15 행사회담 등에 나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북장관급회담은 2차례(제18차, 4.21~24 평양 고려호텔; 제19차, 7.11~13,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개최된 19차 회담에서 남한이 쌀지원을 미사일문제 해결과 연계시키자, 북한은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장관급회담이 군사회담과 6자회담이 아님을 강조하고, 파국적 책임이 남한에게 있음을 지적한 후,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7.19)하였다. 이후 북한은 장관급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회담은 장성급군사회담이 2차례(제3차, 3.2~3, 판문점 통일각;

제4차, 5.16~18, 판문점 자유의 집) 열렸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 직전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제2차, 10.2, 판문점 통일각)에 임함으로써 핵실험 계획을 위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제회담으로는 3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2차례의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각각 1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담·개성공단실무접촉·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에 나왔다. 특히 장관급회담의 후속회담으로 항상 진행되던 경추위 회담이 제19차 장관급회담이후 개최되지 않았음은 북한이 남한당국에 상당한 정도로 반발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6·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북당국이 참여하는 문제로 실무접촉을 1회(5.23, 개성 자남산여관) 가졌다.

중당국대화로서는, 북한이 적십자회담·체육회담·김대중 전대통령 방북관련 회담 등에 임하였다. 적십자회담은 본회담이 1차례(제7차, 2.21~23, 금강산), 실무접촉이 1차례(제5차, 3.17~22, 금강산), 대북수해복구지원관련 실무접촉이 1차례(제1차, 8.19, 금강산호텔) 열렸다. 그리고 2006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이 2차례(제2차, 6.29, 개성 자남산여관; 제3차 11.30~12.2, 카타르 도하 인터콘티넨탈호텔) 진행되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실무접촉 또한 2차례(제1차, 5.16~17, 금강산호텔; 제2차, 5.29, 개성 자남산여관) 개최되었다.

북한은 2006년 남북대화에 총 23회 임하였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개최된 총 148회 회담의 연평균 29.6회보다 작은 회수이다. 북한당국이 2006년에 남북대화와 교류를 증진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했음을 고려할 때, 남북당국대화는 기대성과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자주통일’과 관련, 북한은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기

범할 것을 제안하고, ‘북·남·해외의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상반기 북한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농민단체대표자회의(4.4)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서 개최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6.14~17, 광주 및 전남)와 해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한 반면, 북한 대내행사에 대해서는 ‘조국통일기념 법회’만을 간략하게 보도하였다. 6·15행사와 관련 2004년 2개, 2005년 6개 이상 진행하였던 것과 달리, 2006년에 북한 내부에서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전평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에 대한 총궐기’를 선동하고, ‘거족적인 미군철수투쟁’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6년 상반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RSOI/FE), PSI 부분협력 방침 등 한·미 군사협력관계와 국방중기계획에 의한 무력증강계획 등과 관련하여 남한당국을 집중비난하였다. 그리고 외무성대변인 담화(3.23)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압살기도가 명백한 조건에서 그보다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7.5)와 핵실험(10.9)으로 까지 나갔다.

‘민족대단합’과 관련, 북한은 ‘통일운동단체의 연대연합 강화’를 강조하고, ‘반보수대연합’ 또는 ‘진보대연합’을 촉구하였다. 이후 북한은 상반기에 조평통 대변인담화 및 중방·평방·노동신문 등을 통해 ‘반보수대연합을 이룩하여 극우보수 세력에게 파멸을 안겨야 할 것’임을 선동하였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등을 강조하면서 진보세력 결집을 촉구하였다. 이는 ‘뉴 라이트’ 결성 등과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전공세로 나타났다. 또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및 「국가보안

법」 철폐 투쟁선동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북한은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4.19, 중방)를 통해 독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강력비난 하는 등 남한과 일치되는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2007년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북한은 당분간 김정일정권의 사활과 관계된 대미 협상에 주력할 것이다. 대미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되어 북한 체제안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경우, 그리고 식량 및 경제난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남관계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 신뢰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다. 따라서 북핵해결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관계 회복과 정부의 대북지원이 쉽지 않음을 북한당국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지원을 미사일문제 해결과 연계시키자,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7.19)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다시 남한 주민들의 대북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다. 게다가 북핵실험은 결정적인 불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표결한 것은 다시 북한에게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상반기인 1~3월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대미협상에 주력하고, 4월 이후에는 쌀 및 비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남협상에 나올 것이다. 한편 하반기인 9~10월 사이에는 북한이 ‘평화’의 기치아래 대미 핵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완화시키므로써 진보정권의 차기 대권장악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 허문영 · 북한연구실 실장

III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장관급 회담

2006년에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4.21~24)이 평양에서 열려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 증진, ②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보장을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③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④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한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 ⑤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의 실현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 등을 협의, ⑥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⑦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 적극 추진, ⑧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11~14일 부산에서 개최에 합의하였다.

제18차 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는 첫째,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이다.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평화의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임하였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6자 회담 지연에 따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의 유용한 협의채널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6자회담과 함께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병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했다.

둘째, 호혜적 경험구조 창출에 진전을 보았다. 특히,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 이를 제시하고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유도하였다. 그에 따라 함경남도 단천 등을 비롯한 민족 공동자원개발 사업과, 한강하구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 사업을 제외하여 북측의 공감을 얻었다.

셋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이러한 제약 없이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째, 다양한 분야로 남북관계의 저변 확대를 이루어냈다. 2005년에 이어 6·15 공동행사에 합의함으로써, 민간과 당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동행사가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보건의료, 문화재 보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외연을 확대시켰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다양성을 제고시켜 이전보다 정치·군사적 충격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과거와 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현상은 이에 반비례하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8개월 여간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7.5)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그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제19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이에 한정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의 고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회담 초기부터 팽팽한 분위기이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첫째, 미사일 문제로 우리측은 먼저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앞으로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유관국들이 미사일 발사를 적극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차원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으로서 어떤 쌍무적, 다무적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장관급회담은 군사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둘째, 6자회담 복귀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은 북측의 6자회담 복귀 결단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6자회담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하였다.

셋째, 우리측은 지난 6·15 공동행사를 전후하여 북측 인사의 우리 내부분제와 관련된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쌀·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에 대해 북측은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에 조건을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쌀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대해 상황이 타개되기 전까지는 논의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다섯째, 북측은 기초발언문에서 “선군이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경색시켰다. 이에 우리측은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측 국민들 중에는 선군정치가 남측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리고 선군정치나 미사일이나 핵이 우리측의 안전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제기하지 말도록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회담 일정을 조기 종결하였다. 북측에서 먼저 회담 조기종결을 제의하였는데, 이는 북측으로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측 역시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조속 복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상태에서 논의를 반복하기 보다는 회담을 종결하는 것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아,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북측의 선군 발언이나 종결회의 시 성명 발표 등은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낳았다. 그럼에도 우리측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속 복귀 필요성에 대해 북측에게 설명하고 상황타개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회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07년도 남북장관급회담의 전망은 북한 핵문제 타결의 진전 상황, 남한의 대선정국의 추이,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과 관련하여 짚어볼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북측도 대화 동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남북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남북대화 채널은 언제든 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핵실험 이후 북한의 경제와 식량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유보됨으로써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연유(디젤유) 문제는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쌀을 비롯한 대북 지원과 경험은 남측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07년 초부터 북한은 일찍 찾아올 춘궁기에 길고도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먼저 요구해오거나, 우리측의 회담 제의를 선뜻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민 ·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분야 회담

남북간 경제분야 회담은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6자회담이 지연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7.5)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이 개최되었으나 조기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분야 회담은 다른 분야 회담과 마찬가지로 2006년 하반기에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2006년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세 차례 개최되었다. 제2차 위원급 실무접촉(1.19~20), 제3차 실무접촉(5.3~4)에 이어 곧 바로 제4차 실무접촉(5.18~19)이 개최되었다. 특히 제4차 실무접촉에서는 열차시험운행 행사 관련문제, 경추위 제10차 회의(2005.7)에서 합의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 경추위 제12차 회의일정 및 장소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남북은 열차시험운행 행사를 5월 25일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행사 참가자 주빈은 장관급으로 하며, 기념행사 참석규모는 총 500명 선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공규모, 상환방식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어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발표하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는 5월말 또는 6월초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도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제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2.27~28)과 제12차 실무접촉(5.11~12)은 모두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제12차 실무접촉에서는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에서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열차시험운동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열차 및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신망 구성,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 철도 및 도로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의 빠른 시일내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북측지역의 철도연결 마무리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6.3~6)는 제4차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의 합의 내용과 같이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두 차례의 전체회의, 위원장 접촉 및 위원접촉을 수차례 갖고 9개항의 합의문을 타결하였다. 제12차 경추위 마지막 날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을 위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12차 경추위에서는 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발효, ②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협의 추진, ③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조건 마련을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 개최, ④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 ⑤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⑥ 경제·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⑦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⑧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고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공동위원회 명단교환과 회의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⑨ 경추위 제13차 회의를 9월중 평양에서 개최, 일자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10개항에 합의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남측은 2006년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 데 따라 그 대가를 상환, ②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슘크링카 등으로 상환하고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 ③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크링카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 ④ 북측은 경공업 협력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보장, ⑤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과 북은 제12차 경추위 합의사항인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6.20~21)을 개성에서 개최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를 비롯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편의시설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제12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임진강수해방지 제1차 실무접촉(6.26~27, 개성)을 개최하였다. 이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2005년 실시한 쌍방

단독조사 결과의 검토,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방안, 홍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세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2007년 남북한간 경제분야 회담의 전망은 매우 흐리다. 이미 2006년 하반기부터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한 개성공단 관련 문제 및 기타 경제 관련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대화 수준의 만남은 예상된다. 그러나 당국 차원의 실무협의회, 실무접촉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개최는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척이 보일 때 가능하다.

● 최수영 ·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다. 군사회담

2006년도 남북군사회담을 위한 2차례의 실무회담과 2차례의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남북한 당국은 여기에서 남북군사 관련 뚜렷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2005.12.13~16)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새해 들어 조속 개최’를 확인함에 따라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2.3)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개최된 3·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1·2차 회담에서 도출된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3.2~3)은 통일각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해 해상에서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되었다. 여기에서 남측은 기존의 남북 해군간 충돌방지

대책 개선조치로 국제상선공통망 주파수 변경문제, 쌍방 함정간 일일 정기시험통신, 양측 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연결, 공동어로수역(안)과 함께 철도·도로 통행 군사보장합의서 체결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서해문제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서해 해상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합의되면 공동어로문제와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적 대책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으나 핵심적 주장은 서해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있었다. 그 결과 양측은 의제 및 접근방법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공동보도문, 후속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담은 종결되고 말았다.

이어 개최된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5.16~18)에서도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쌍방의 이견만 확인한 채 회담은 끝나고 말았다.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북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을 끝까지 견지하였다. 김영철 북측단장은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기본 근원인 서로 다르게 주장해 온 모든 경계선들을 다 같이 대범하게 포기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서해해상 경계선에 대한 남북 재협상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북측은 서해해상 경계선 관련, 남북재협상 가능성을 굳히기 위하여 1999년 ‘해상군사통제수역’과 2000년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 보다 다소 완화된 새로운 경계선 대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즉 북한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주권을 인정하고 섬주변 관할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한다”고 구체화함으로써 NLL 관련 재협상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섰던 것이다.

3·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신뢰구축을

진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실사구시적, 합리적 개선조치 등의 의제를 제의하고, 동 회담을 실무적 차원의 회담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북한은 서해해상에서 충돌문제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거시적 입장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입장과 자세, 원칙, 합의해야 할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성급회담을 이리한 ‘근본문제’의 해결창구가 되어야 하며 서해해상충돌방지 개선 조치 등은 실무급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논의조차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북한은 장성급 군사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7.7)하고는 미사일 시험발사(스커드, 노동, 대포동)를 감행하였다. 미사일 시험발사 이전에 북측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대남 군사위협 강조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또한 북측의 제의에 따라 남북군사실무회담(10.2)이 개최되고 난 후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 문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의 통행질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데 국한한 것으로 보아 핵실험 전 남한에 대한 위협 경고 메시지 전달을 위한 기회로 남북군사회담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종합하면 2006년도 남북군사회담 관련 북한의 정책적 초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 하고 새로운 서해경계선 획정 논의와 군사분계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 등을 통한 남한의 북한 ‘흔들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남 성토 또는 위협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도에도 북한은 NLL 관련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NLL 재획정 요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굳혀 나가기 위해서 남북군사회담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당국 간 대화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

은 군사회담을 제의해 올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NLL 재협정 문제를 공론화시켜 ‘우리민족끼리’ 해결이라는 평화 분위기를 성숙시켜 이를 대남 전략전술에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NLL에 대한 ‘근원적 조치’를 고집함으로써 남측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NLL 재협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고착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측의 NLL 고수 입장을 충돌재발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서해해상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남북한 군축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여기에서 정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등과 관련된 요구를 쏟아냄으로써 이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면서 반미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장성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 군사회담을 ‘정전 군사회담’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다. 동시에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사이비’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남북한 유화적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전환을 꾀하는 데 적합한 군축회담을 제의할 가능성도 크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06년 남북교역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여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모두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확대는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한 물자 및 생산품의 반출입 확대에 따른 것이다. 비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비록 2006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대북지원이 다소 주춤했으나 전체 지원액이 2005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사업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오히려 3대 경협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날짜(5.25)에 성사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개성공단사업은 진출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단지 2차(12만평) 분양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1~10월)에 경제협력사업(자)으로 23건을 승인하였다. 이 중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승인은 16건으로 서도산업, 에스엔지, 제이슨상사, 혜성정보통신, 웨미리마트, 한국엘피가스 등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개성공단 밖의 지역에서는 농협중앙회, 아사달,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시행(6.30)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근거를 확

보하였다.

2006년(1~10월) 남북교역액은 총 11억 6,932만 달러로 전년 동기 8억7,565만 달러 대비 33.5% 증가하였다. 이 중 반출액은 개성공단사업 관련 물자 반출 및 민간차원 대북 지원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7억 4,3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0% 증가한 4억 2,552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것은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이 급증하였고, 석유류와 광산물의 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품목군별 2006년(1~10월) 거래동향에서 반출을 살펴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농림수산물(2억 644만 달러)은 107.5%, 전자전기제품(4,788만 달러)은 71.0%, 철강금속제품(8,833만 달러)은 37.4% 증가한 반면, 화학공업제품(1억 7,931만 달러)은 7.3% 감소하였다. 반입의 경우 전 품목군이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중 반입 비중이 큰 품목군인 석유류(1억 2,061만 달러)는 25.5%, 철강금속제품(1억 387만 달러)은 180.1%, 농림수산물(1억 371만 달러)은 18.1%, 광산물(4,327만 달러)은 120.0% 증가하였다.

한편 남북교역 중 상업적 거래는 2006년(1~10월) 7.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4.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였다. 이 기간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각각 65.2%, 34.8%를 차지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일반교역과 경제협력사업 중 개성공단 관련 물자의 반출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개성공단 관련 물자의 반출입액은 2005년 1억 7,670만 달러였고, 2006년(1~10월)에는 2억 3,3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III-1> 참조).

<표 III-1> 거래 유형별 남북경협 추이

(단위: 100만 달러)

| | 상업적 거래 | | | | 비상업적 거래 | 합계 |
|---------|--------|-------|-------|---------------|------------|---------|
| | 일반교역 | 위탁교역 | 경제협력 | 소계 (비중) | | |
| 1995 | 230.4 | 45.9 | 0.0 | 276.3 (96.2%) | 11.0 | 287.3 |
| 2000 | 110.5 | 129.2 | 33.6 | 273.3 (64.3%) | 151.8 | 425.1 |
| 2002 | 171.8 | 171.2 | 25.0 | 367.9 (57.3%) | 273.8 | 641.7 |
| 2004 | 171.8 | 176.0 | 89.2 | 436.5 (62.6%) | 260.5 | 697.0 |
| 2005 | 209.8 | 209.7 | 270.0 | 689.5 (65.3%) | 366.2 | 1,055.8 |
| 06.1~10 | 248.5 | 212.9 | 300.5 | 762.0 (65.2%) | 407.3 | 1,169.3 |

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 통계』

주: 1) 상업적 거래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기타 경협사업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민간 지원과 사회·문화 협력사업, 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제공 등을 포함함.

2) () 내의 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전체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개성공단은 시제품을 생산(2004.12)한 이후 2006년 10월말까지 총 생산액 6,981만 달러와 수출액 1,562만 달러의 공단으로 발전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정·배수장 착공식(3.28), 외국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6.22), 기술교육센터 착공(7.24)이 진행되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 자동차관리규정」을 발표(7.25)해 총 15개의 「개성공업지구법」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10월말 현재 시범단지(2.8만 평)의 15개 업체와 1차 본단지(5만 평)의 2개 업체 등 총 17개 공장이 생산 가동 중이고, 본단지 9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다. 개성공단에는 11월 말 현재 북측 근로자 10,193명(입주기업 7,733명, 지원기관 340명, 공사인력 2,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단지는 2005년 8월에 1차 5만 평 분양을 시작으로 잔여용지 약 60만 평을 2006년 내에 단계적으로 분양될 계획이었으나 북핵 사태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다. 9월말 현재 1단계 100만 평의 부지 조성공

사는 완료되었고, 구조물 공사는 약 68%가 진행되어 200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실험에 따라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아산은 금강산골프장 분리, 해금강 호텔 개보수, 직원숙소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금강산 협력사업 변경 승인(3.31)을 받았다. 또한 현대는 북측 『아태·명승지종합개발회사』와 내금강코스 답사를 공동으로 실시(5.27)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은 2006년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로 인한 남북관계 불안과 남북경협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여 난관에 봉착하였다. 2006년(1~10월) 금강산관광객은 전년 동기의 274,942명에 비해 약 20% 감소한 216,872명으로 집계되었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은 5월 25일에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무접촉 북측 단장(박정성) 명의로 “군사적 보장 장치 미비” 등을 들어 열차 시험운행 연기를 통보(5.24)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이후 제12차 경추위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열차 시험운행의 조속 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연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7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여론의 향방,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대북제재의 수위 조율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에 임할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를 추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협사업(3대 경협사업 및 기타 사업)은 지원이 중단 또는 최소화되고, 기존

사업은 지속될 것이나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 투자사업은 투자 심리의 위축 등으로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북 지원은 긴급을 요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으로 한정될 것이다.

2007년 남북교역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에서 모두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적 거래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비록 증가추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증가율은 매우 소폭에 그칠 것이다. 경제협력사업 관련 물자의 반출입 증가폭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것은 개성공단 건설 관련 물자 및 생산품의 반출입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특별한 상황 반전이 없는 한 관광객은 소폭 증가에 머물 것이다. 대북지원은 2006년 수준에 머물러 비상업적 거래는 정체가 예상된다.

● 최수영 ·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나. 사회분야

2006년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양과 질에 있어서 2005년의 추이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일정정도 지속시킬 남북한 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등 일부 상징적 사안의 교류협력이 성사되었으나 핵실험이후 전반적인 위축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주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도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민간차원의 다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방북연기 등 북핵의 부정적 영향요인들이 현재화되었다. 정부가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행사추진의 제약과 아울러 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전환되면서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특히 여론악화 상황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 및 대북지원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는 NGO는 재정적 타격이 심화됨으로써 정부의 재정보조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핵실험 이전의 경우 2005년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추이를 이어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문화 공동행사와 분야별 교류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북핵실험이전인 9월말 기준, 방북인원은 수해 및 대규모 방북행사 취소로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래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05년 동기 246건 → 276건).

2006년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추이에 영향을 받았다. 6·15공동선언 6돌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 당국 사이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2005년 최초로 당국 대표단이 참여한 평양 6·15 행사에 이어 같은 형식의 남북교류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 민간대표단장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공세를 함으로써 행사의 의의를 반감시켰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양의 윤이상 음악회(10.18~20)의 경우 남한의 「윤이상 평화재단」 참관단이 방북하여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북핵실험으로 예정된 남북 합동공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축전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명훈 등 음악가들이 참가를 포기함에 따라 북한 단독으로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 체육분야의 경우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사업 및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등의 주제로 남북한간의 교류들이 성사되었다.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서울총회에 북한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3.31~4.7),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및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하 아시안게임개막식 공동입장(12.2)이 성사됨으로써 남북한은 국제종합대회 사상 여덟 번째의 남북공동입장을 기록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개최식에 공동 입장한 이후 남북한은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과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토리노 동계올림픽(2.10) 등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공동입장을 관례화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6년 남북학술교류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 남한의 학자들이 평양을 방문(1.20~24)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북한의 교육기관을 둘러보고 '6·15공동선언 시대의 남북 지식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남북공동 좌담회를 열었다.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가 남북학술교류의 활성화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남북공동연구와 개발 등으로 발전시켜 교육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설립(2.20)되었으며, 이는 대학교수와 학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 해외 관련단체 등 교류주체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학술교류협정」을 체결

(4.23)하고 남북 양측이 공동의 관심을 지닌 학술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학술 토론회 개최,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 학술교류의 내용과 구체적인 지원분야·연구주제 등을 확정하기로 함으로써 남북학술교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노기술 관련 학술토론회(8.21~23, 금강산)가 남북공동행사로 개최되었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학자들의 공동토론회'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남측의 「남북교육협력추진위」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남북 나노기술 연구현황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종교분야의 경우 기존의 계속사업 성격의 협력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북핵실험 이후 「대한불교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이 공동으로 복원을 추진 중인 금강산 신계사의 주요 전각 낙성식이 현지에서 봉행(11.19)됐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낙성식은 대웅보전 이후 2년간 복원한 만세루, 극락전, 어실각, 나한전, 축성전, 칠성각, 산신전, 범종각 등의 10개 주요 전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07년 남북사회문화교류는 급속한 위축이나 활성화와 같은 큰 변화 없이 그 동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남북관계개선의 관성과 아울러 남북한 모두 남북관계 지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6자회담의 진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및 국내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가시적 결과가 단기간에 도출되기 힘든 상황에서 북핵실험 이후 냉각된 국내의 여론악화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보수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북한퍼주기’ 등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고, 민간차원의 협력추진 주체들의 경우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핵실험으로 위축된 입지를 확대하고,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한과의 학술, 예술, 스포츠, 종교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민족적 상징성을 띤 사안을 파격적으로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07년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한범 ·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인도주의 사안

가. 대북지원

대북지원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대북지원을 둘러싼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미 북한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트 워치 등 인권단체들이 북한주민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리에 관한 구체적 실태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 및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현장접근 허용 및 분배투명성 보장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원칙을 무시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6년에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을 통한 통합지원호소(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말 북한당국이 대북지원을 긴급구호가 아닌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줄 것과 WFP를 비롯한 평양주재 유엔기구와 국제 NGO 요원들에게 사업종료와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체류요원의 수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주하면서 대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북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월 30일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 만 달러(정부 20,515만 달러, 민간차원 7,342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4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상회하였으나,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민간지원분을 크게 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양자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내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2>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단위: 만불)

| 구분 | '95.6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11 | 누계 |
|----------|----------------|-------------|---------------|---------------|---------------|----------------|----------------|----------------|----------------|----------------|----------------|----------------|-----------------|
| 일반 구호 | 23,225 100% | 455 99% | 4,329 92% | 2,891 91% | 565 12% | 1,435 13% | 6,067 45% | 4,174 31% | 6,157 39% | 10,538 41% | 4,346 20% | 8,786 32% | 72,968 44% |
| 농업 복구 | | 5 1% | 205 4% | 254 8% | 3,941 84% | 8,562 75% | 5,476 40% | 7,351 54% | 7,673 49% | 9,450 37% | 13,744 65% | 15,383 55% | 72,044 44% |
| 보건 의료 | | | 189 4% | 40 1% | 182 4% | 1,380 12% | 1,996 15% | 1,967 15% | 1,933 12% | 5,624 22% | 3,164 15% | 3,688 13% | 20,163 12% |
| 계 | 23,225 100% | 460 100% | 4,723 100% | 3,185 100% | 4,688 100% | 11,377 100% | 13,539 100% | 13,492 100% | 15,763 100% | 25,612 100% | 21,254 100% | 27,857 100% | 165,175 100% |

※ 식량차관 제외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2006년 11월 30일 현재)

1999년부터 시작된 대북비료지원은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35만 톤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2000년부터 매년 50만 톤의 대북 식량차관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에는 북한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해 식량차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에서 북측이 식량차관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 당국 간 지원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7월 북한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하면서 일부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0만 톤과 수해복구물자 지원(763억 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대북수해지원에 대해 매칭펀드로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국 간 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수해물자 일부의 지원마저도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06년 정부는 장기간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영유아들의 균형발달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에 성장동력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 및 여성의 건강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의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민간단체들의 지역단위 영유아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원단체의 수가 60여 개로 급증하였으며, 정부는 개별단체사업, 분과별 합동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취약계층들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북한 식량난의 구체적인 악화실태에 대한 기록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중단된 당국 간 지원이 6자회담 재개 등 특별한 상황변화이전에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핵실험이후 중국은 대북지원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경통제강화로 인해 개인차원의 식량 거래 등이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 장마당에서 식량가격은 북한의 식량 생산분이 소진되는 시점에서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특정계층의 식량접근은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남북당국 간 식량차관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비료지원이 파종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식량차

관과 비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민간단체들의 촉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 및 기타 남북간 인도주의사안을 명분으로 대북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핵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북한개발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도 식량난으로 인한 어린이 및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대북지원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이산가족문제

2006년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적십자회담과 화상상봉이 각각 한 차례씩 이루어졌으며, 두 차례의 직접 상봉행사가 실시되었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21~23)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을 통해 남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북 각각 200명씩 금강산 특별상봉 실시, 6·15와 8·15를 계기로 남북 각각 60가족씩 특별 화상상봉 실시,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 문제 계속 협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6월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은 특히 “쌍방은 이산가족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전후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있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나타냈다. 회담에서 북한은 전후 납북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온 종래의 태도 변

화를 시사했다. 또한 북한은 이 회담에서 전후 남북자의 생사확인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담에서 남측은 국군포로·남북자의 생사확인 작업을 일반 이산가족들과는 별도로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북측은 기존의 방식대로 특수 이산가족으로 포함시켜 상봉행사를 갖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4.21~24)에서도 남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후 남북자문제를 공식의제화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이어 전시·전후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당국간에 본격 공론화 및 의제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남북은 남북자·국군포로문제를 이산가족문제와는 별도로 의제화하여 다룸으로써 문제해결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회담에서 남북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실질적 해결’이 시사하는 바, 앞으로 남북자·국군포로문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과정에서 극소수 상봉이라는 ‘끼워 넣기’식의 해결보다는 별도의 남북자와 국군포로 생사·주소확인, 상봉, 송환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할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행사(2.27~28)는 남북 각각 40가족이 참여하여 남한 지역의 13개 상봉실과 북한 지역의 10개 상봉실에서 진행되었다. 화상상봉행사를 통해 남측 40가족 153명이 북측가족 100명을 만나고, 북측 40가족 119명이 남측가족 181명을 만나 총 553명이 화상으로 가족·친척들과 상봉하였다. 또한 제4차 화상상봉행사를 통해 총 1,303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 제13차 이산가족 직접상봉행사(3.20~25)는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서도 남측 99가족 148명(동반가족 49명 포함)이 북측가족 239명과 상봉하

고, 북측 100명이 남측가족 420명과 만나 총 907명의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친척들과 상봉하였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총 2,341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13차 직접상봉행사의 진행 과정에서는 지난 제9차 상봉행사(2004.3.29~4.3) 때에 남측 지원인원의 사소한 말 실수를 문제 삼아 북측이 행사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한 사건과 유사하게 북측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상봉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공동취재단이 금강산에서 철수해 버린 극한 상황을 초래한 이 사건은 북측의 비상식적인 언론 검열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북측은 남북이 “상대 지역에서 취재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합의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는바, 남측 방송사의 위성차량에 탑승하여 송출 내용을 검열하며 ‘남북자’, ‘나포’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송출을 막았는가 하면, 방송 녹화 테이프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해당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하는 등 남측의 정상적 취재활동을 제한하였다. 또한 북측은 남한당국과 공동취재단의 서면 사과 요구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개별상봉 지연, 상봉단 1진의 귀환 지연, 2진의 상봉행사 지연 등 행사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한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은 전화통지문(4.21)을 통해 6·15 계기 금강산 특별상봉(6.19~30)과 8·15 계기 특별 화상상봉(5차, 8.9~11; 6차, 8.21~23)을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은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명의로 북측 제의에 동의하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제14차 특별직접상봉은 북측이 제의한대로 금강산 지역에서 남과 북에서 각각 200가족이 참석해 2박 3일씩 네 차례에 걸쳐 실시(6.19~30)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서서는 남측 195가족 291명(동반가족 96명 포함)이 북측가

족 466명과 만나고 북측 197명이 남측가족 821명을 만나 총 1,775명이 가족·친척 상봉을 하였다. 또한 총 4,670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

제14차 이산가족 직접상봉행사에서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인 납북자 김영남(1978년 8월 5일 납북)과 그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만났다. 납북자 김영남의 가족상봉은 그의 전 부인이었던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북한에 대해 비난이 거셌던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한편 납북자 김영남은 가족상봉 후 가진 기자회견(6.29)에서 자신의 일은 “납치도 자진월북도 아닌 대결시대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 입북”이며 전 부인 메구미는 우울증에 의한 정신분열로 병원에서 자살(1994.4.13)했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래 지난 6년 동안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으나 남북 이산가족의 직접상봉과 화상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2005년 8월 말 착공된 금강산 면회소 공사도 200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로 인해 남측의 쌀과 비료지원이 유보된 데 대해 북한은 8월 중 추진하기로 합의한 8·15 이산가족 특별화상상봉을 취소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도 전면 중단하는 등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이 결렬된 것과 관련한 성명 발표에서 회담 결렬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며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한 계단 발전시킬 데 대한 제안을 토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종료 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북한은 “귀측은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쌀과 비료지원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화상상봉과 면회소 건설 공사 중단입장을

통보하였다. 8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이 재개되면서 한동안 상봉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10.9)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감에 따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민주노동당 방북단(10.31~11.4)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필요성과 조속한 회담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우선 화상상봉부터 조속히 개최하도록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대북 쌀·비료지원과 연계시켜 온 북한으로서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대북지원이 재개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면회소 건설 공사 재개 등과 같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인도적 사업인 쌀·비료 지원을 미사일·핵문제와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북지원 중단과 함께 화상상봉 일정을 취소하고 면회소 건설 공사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이 시사하는 바, 현 시점에서 문제해결의 관건은 북핵문제의 진전에 있다.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게 되면 대북 쌀·비료 지원 재개와 함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최우선적 과제로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순희 ·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2006년에도 중국 및 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2월 26일 현재 2,011명으로 2005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9,698명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48명으로 3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1,89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1,38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4년의 입국규모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는 태국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던 북한이탈주민 175명이 태국경찰에 연행되어 태국이민국 수용소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난민지위신분증을 소지한 일부가 먼저 귀국하고 순차적으로 국내입국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4년 특별기를 통한 대규모입국사태와는 다르지만, 태국이 입국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게 되었다.

2006년도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탈북난민수용이 구체화되었다. 2월 미 하원에서 탈북난민들의 미국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미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기점으로 백악관 대변인 성명과 북한인권특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 여성(김춘희)의 강제송환을 비난하고 유엔고등판무관실의 접근 허용을 촉구하였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북한인권자유주간에 북한이탈주민을 면담(4.28)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후 4월 21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서재석 가족에 대해 미 이민법원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미 국무부가 2005년

2월 보고서에서 한국국적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운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망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서재석의 경우에는 ‘추방당해 복송당할 경우 다시 인권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망명허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변호내용이 국내적으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미국이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북한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후 미국이 동남아 체류 북한이탈주민 6명에 대한 난민지위를 통한 미국입국을 성사시키자, 선양 한국영사관에서 보호 중이던 북한이탈주민 4명이 미국영사관으로 진입하여 미국입국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난민지위가 부여되었으나, 1명은 북한 내 국가기관 재직경력을 이유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06년에는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이 실행되면서, 국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입국 기대가 다시 가시화되었으나, 대규모의 미국입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입국이후 미국으로 이동하여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는 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재석 사건이후 여성북한이탈주민 1명에게 정치적 망명이 인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관련 단체들은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난민지위 허용이 수십 명단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15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난민지위가 허용되었으며 대규모 집단수용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2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7개국이 1990년대 중반이후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700여 명 중 280여 명을 수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독일에서 455명의 북한국적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이중 23명에게 난민지위 혹은 그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졌으며, 163명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약 120명의 북한국적

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25명이 난민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도 북한국적자의 난민지위 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좋은벗들, International Crisis Group이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1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좋은벗들’은 탈북여성과 중국남성사이에 출생한 어린이가 5만에 이를 것이며, 이들이 경제적 빈곤 및 신분 등으로 인해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7년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 영아살해, 강제송환이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중국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된다면, 1990년대 후반과 같은 대규모 탈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및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의 입국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중개인 및 관련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국내입국규모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이미 공개된 태국 및 베트남 등 입국경로가 현지국의 부담으로 통제될 경우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인권문제

2006년도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상반기에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개편, 하반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이슈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200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공론화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반기 유엔인권레짐 체제 개편이 북한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 결의안(A/RES.60/251)에 따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유엔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동 이사회는 47개 초대 이사국을 선출(5.9)한 데 이어 제1회의(6.19~30), 제2회의(9.18~10.6), 제3회의(11.27~12.8)를 개최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 그런데 2006년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운영방안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은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선정된 특별보고관들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간 연장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 초대이사국으로서 한국대표는 기술적·제도적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대화를 갖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 최명남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발언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가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삼는 인권결의와 특별보고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의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06년에도 북한당국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과 공식접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1.23), 유엔총회(9.15)에 북한인권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유엔사무총장 명의로 북한과의 접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1.25)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 및 기술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문제는 특별보고관이라는 유엔인권레짐을 통해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하여 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4.30)하였다.

하반기 북한 핵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차원에서는 2005년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11.17)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91표, 반대 21표, 기권 60표로 통과되었다. 한국정부는 2005년 기권하였지만 2006년도에는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였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문답 형식으로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강력하게 비난(11.20)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찬성표결에 대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11.18)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하여 초래될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유엔 총회는 제3위원회에 의해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을 찬성 99표, 반대 21표, 기권

56표로 정식 채택(12.21)했다. 한국은 제3위원회에 이어 총회에서도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상반기 유엔인권이사회 출범으로 유엔인권레짐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연례각국 인권보고서(3.8, 2005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미국 기업연구소(AEI) 주최 토론회에서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발언(4.30), 연례인신매매보고서(6.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숙련공 해외송출과 북한 내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북한노동자의 노동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하면서 인권분야에서 유럽연합과 북한 사이의 인권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유럽의회는 탈북자 청문회 개최(3.23), 북한인권결의안 채택(6.15)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2006년 일본의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채택(6.16)하였다.

비정부 기구들도 행사 및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먼저 북한인권 관련 국제행사들이 증가하였다. 『아시아인권센터』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아동노동과 인신매매’라는 주제로 아시아인권포럼을 개최(2.6~7)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프리덤하우스』는 워싱턴(2005.7)과 서울(2005.12)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브뤼셀에서 제3차(3.22~23), 로마에서 제4차 북한인권국제대회

(7.12)가 개최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재단』은 베르겐에서 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5.9~11)하였다. 『평화재단』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을 개최(7.11)하였다.

연례보고서와 특별보고서 등 북한인권실태를 평가·정리하는 보고서들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 2006 연례세계보고서’(1.20), ‘국제사면위원회 2006 연례보고서’(5.2),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국난·이민위원회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6.14) 등 연례적인 인권 실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인권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탈북자 면접을 토대로 10월 최초로 ‘200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하벨 전 대통령 등의 의뢰를 받아 미 북한인권위원회가 ‘Failure to Proj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북한은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형법 개정 등 국내 입법을 통해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유엔인권레짐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2007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행태로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 의회 결의안 등을 토대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양자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인권을 거론하기보다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 북한노동자의 인권 등 노동의 권리, 납치자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강행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안보 문제가 중심을 점하면서 상대적으로 2006년도 하반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인권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도에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대립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의 공론화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움직임들이 보다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 김수암 ·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부록: 2006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관계 일지

- 01.08 경수로 부지 체류인원 전원 철수
- 01.11 제 4·5차 식량차관 분배현장 방문(남포·청진·원산)
- 01.12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실무대표단은 개성에서 북한 대표단(민족화해협의회)과 실무회담을 갖고 벼농사 시범농장을 지나해 9천평에서 올해는 30만평(100ha)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 01.19~01.2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위임급 실무접촉(개성)
- 01.20~01.24 남북학자 공동 좌담회(평양)
- 02.03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통일각)
- 02.07~02.11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 대표단(임채정 의원 등 10명) 방북(평양)
- 02.10 토리노 동계올림픽 공동입장
- 02.10 현대-북한, 금강산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
- 02.10 현대아산과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는 원산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개발하는 금강산 개발 종합계획(총 투자규모 22억 6,000만 달러)을 추진하기로 합의
- 02.20 남측,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출범
- 02.20~02.24 「정당 청년위원회」 대표단 방북(평양)
- 02.21~02.23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02.27~02.28 제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
-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행사
- 03.02~03.03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통일각)
- 03.17~03.22 제5차 적십자회담 실무접촉(금강산)
- 03.20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관련 3차 실무접촉(개성)
- 03.20~03.25 제13차 이산가족 직접 상봉행사(금강산)
- 03.28 개성공업지구 정·배수장 착공식
- 03.31 현대아산, 금강산골프장 분리·해금강호텔 개보수·직원숙소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금강산 협력사업 변경 승인 취득
- 03.31~04.07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서울총회에 북한 대표단 참가
- 04.04 남북농민단체대표자회의
- 04.04~04.06 「제3차 남북공동 식목행사」(금강산)
- 04.05 「6·15 민족공동위」 실무접촉(개성)
- 04.07 「6·15 공동위」 청년학생분과 실무접촉(개성)

- 04.08 비료 15만톤 대북지원 전달 완료
- 04.21 남북 민화협, 「공동 식목행사」(개성)
- 04.21~04.24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04.23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간 「남북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평양)
- 04.26~04.28 「정춘흑연광산」 준공식(황남 정춘)
- 04.27 「6·15 민족공동위」남북위원장 회의(개성)
- 04.28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개성공단 방문
- 04.28 「윤이상 기념 음악회」(금강산)
- 05.03~05.0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 05.11~05.12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
- 05.16~05.1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관련 제1차 실무접촉(금강산)
- 05.16~05.18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05.16~05.20 한완상 한직 총재 일행 평양방문
- 05.18~05.1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 05.19 「6·15 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개성)
- 05.23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실무접촉(개성)
- 05.25 경의선·동해선 열차시범운영,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
- 05.27 현대, 북측 아태·명승지종합개발회사와 내금강코스 답사 공동 실시
- 05.29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 06.03~06.0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제주)
- 06.06 제12차 남북경추위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채택
- 06.06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개최(개성)
- 06.07~06.11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관련 남북공동조사
- 06.14~06.17 6·15 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광주 및 전남)
- 06.19~06.30 제14차 특별직접상봉, 2박3일씩 4회 실시(금강산)
- 06.20~06.21 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개성)
- 06.21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무산 발표
- 06.22 개성공업지구 외국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
- 06.26~06.27 임진강수해방지 제1차 실무접촉(개성)
- 06.27 「아리랑 공연」 참관 관련 남북 실무접촉(개성)
- 06.29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개성)
- 06.30 정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07.05~07.06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 관련 남북협의(금강산)
- 07.07 북한, 장성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 07.11~07.13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부산)
- 07.2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 | |
|-------------|---|
| 07.24 |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착공 |
| 07.25 |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자동차관리규정 발표 |
| 07.28 | 남북 「민화협」 간 실무접촉(금강산) |
| 08.04~08.06 | 「고 정몽헌 회장 추모행사」(금강산) |
| 08.11 | 「남북 6·15 공동위」 실무접촉(금강산) |
| 08.09~08.11 | 5차 특별화상상봉 실시 |
| 08.19 | 제1차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실무접촉(금강산) |
| 08.21 | 통일부, 「임동옥 통전부장 사망」 조의전통문 발송 |
| 08.21~08.23 | 나노기술 관련 학술토론회(금강산) |
| | 6차 특별화상상봉 실시 |
| 10.02 | 제2차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통일각) |
| 10.18~20 | 윤이상 음악회 개최(평양) |
| 10.31~11.4 | 민주노동당 방북 |
| 11.17 | 정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
| 11.18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에 비난 성명 발표 |
| 11.19 | 금강산 신계사의 주요 전각 낙성식 |
| 11.30~12.02 |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카타르 도하) |
| 12.02 | 도하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동입장 |

동북아정세 일지

| | |
|-------------|--|
| 01.19 | 한·미 고위전략회의 개최(워싱턴) |
| 01.23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위원회에 상황보고서 제출 |
| 01.27 | 미 월스트리트저널지, 북한 나진과 평양 주변에 연간 20억급 규모 대규모 위조담배공장 운영 세계 각국에 밀수출 보도 |
| 02.06~02.07 | 아시아인권포럼 개최 |
| 02.28 | 러시아, 군 개혁안 발표 |
| 03.01 | 부시 대통령 인도 방문, 미·인도 정상회담 개최 |
| 03.17 | 남북한·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블라디보스톡) |
| 03.21~03.22 | 푸틴 대통령 방중, 중·러 정상회담 개최 |
| 03.22~03.23 | 프리덤 하우스,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브뤼셀) |
| 03.23 | 유럽의회, 탈북자 청문회 개최 |
| 03.27~03.28 | 제7차 「한·러 포럼」 개최(모스크바) |
| 04.02~04.05 | 한국 경제사절단 방러 |
| 04.10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러 |
| 04.16 | 웬잔 전 대만 국민당 주석 방중,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 |
| 04.17 |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서울) |

- 04.20 후진타오 주석 방미, 미·중 정상회담 개최
- 04.25 노무현 대통령,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 발표
- 05.01 주일미군 재편안 최종 승인
- 05.06 재중국 탈북주민 6명 동남아 거쳐 미국 도착, 미 북한인권법 적용 수용한 첫 번째 난민
- 05.09~05.11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재단 제7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베르겐)
- 05.09~05.15 미 태평양사령관 방중, 군사협력 증진방안 협의
- 05.11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에 식량지원 재개 당국과 합의
- 05.12 일본 경찰, 돗토리현 사카이항 정박 중인 북한 화물선 ‘두루봉 1호’ 마약 밀반입 혐의 수색
- 05.19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주민 4명, 이웃 미국 총영사관 진입 및 미국 망명절차 추진
- 05.29 중·인도 군사교류 확대 합의
- 05.30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회담(베이징)
- 05.3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열고 북한 신포 경수로사업 공식종결 발표(뉴욕)
- 06.05~06.09 제1차 한·미 FTA 협상(워싱턴)
- 06.06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중 공동으로 발해만 유전개발 합의 발표
- 06.14 미국 민간단체 난민·이민위원회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 발표, 중국에 탈북주민 5만명 있으며 지난해 5천여명 강제북송됐다고 밝혀
- 06.15~06.18 제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상하이)
- 06.15 유럽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06.16 일본의회,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채택
- 06.26 한·중 외무장관 회담 개최(베이징)
- 06.27 반기문 외교장관 방중,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
- 07.05 북한,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 시험발사
- 07.10~07.14 제2차 한·미 FTA 협상(서울)
- 07.12 프리덤 하우스, 제4차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로마)
- 07.14 G8 정상회의 앞서 미·러 정상회담(상트 페테르부르크)
- 07.15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 채택
- 07.18~07.24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방미,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 개최
- 07.19 미 국무부, 10월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난민 6명에 영주권 발급기로 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혀

- 07.19~07.21 러시아국영철도회사 사장 방한
- 07.21 일본 경찰청 장관, 마약류인 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대량 밀반입에 북한정부 연루 5월 적발 밝혀
- 07.29 중국 백두산 관할 행정기관 따로 설립,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추진
- 08.05 미 국무부, 이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부품제공 연루혐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 등 북한 회사 2개 포함 7개사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과 거래중단
- 08.17 미 ABC·CNN 방송,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역 외곽서 수상한 트럭 이동 모습 미 정보기관에 잡혀 지하 핵실험 준비 징후 보인다고 보도
- 08.21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 북한 관련 해외 돈거래 모두 차단 시사
- 09.02 미 국방부, 북한 대포동2호 미사일 가정한 대륙간탄도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
- 09.05 중국 사회과학원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 기자조선·부여·고구려·발해 모두 중국 역사로 규정한 연구과제 요약본 무더기 공개
- 09.06~09.09 제3차 한·미 FTA 협상(시애틀)
- 09.07 한·미 FTA 3차협상 시작 농산물 등 1만 1,261개 품목 개방 수준 처음 논의(뉴욕)
- 09.08 미 국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차관, 중국·일본·베트남 등 세계 금융기관 20여곳 북한과 거래 중지 밝혀
- 9.13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위안부 동원관련 일본 정부서 책임인정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라는 내용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 미 하원 국제관계위,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거래 기업·개인 제재내용의 '북한 비확산법안' 만장일치 채택
- 09.14 한·미정상회담(워싱턴)
- 09.15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총회에 상황보고서 제출
- 09.20 미·중 해군, 최초의 1단계 합동수색·구조훈련 실시(캘리포니아주 해안)
- 09.22 미 재무장관 방중, 우이 부총리와 경제전략회담 개최 합의
- 09.25 파키스탄 핵물리학자 칸 박사 자서전 '사선에서' 출간, 북한에 우라늄농축기 20여개 넘겼다고 밝혀
- 09.26 일본 아베 신조 내각 출범
- 09.27~09.28 제10차 SPI 회의(워싱턴)
- 10.02 일본 재무성, 대북 금융제재 방침 발표(9.19) 이후 처음으로 북한 계열 단천은행 일본 내 외화예금계좌 동결 발표

- 10.03 북한, 핵실험 계획 성명발표
- 10.06 유엔 안보회, 북한 핵실험 계획 포기과 6자회담 복귀 촉구 의
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 북한서 핵실험 강행하면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위협 포함된 유엔결의안 마련할 것 언급
- 10.08 중·일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 10.09 한·일 정상회담 개최(서울)
북한 핵실험
- 10.12 제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10.13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 10.14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채택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 10.16 중국 주요은행 전 지점, 대북 송금·출금 업무 일부 중단하거
나 제한 시작
- 10.17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방한
- 10.19 탕자쉬안 국무위원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 10.20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워싱턴)
- 10.23~10.27 제4차 한·미 FTA 협상(제주)
- 10.26 중·러 항공모함의 공동 제작·생산 합의
- 10.30~10.31 중·ASEAN 정상회담 개최
미·러, ‘전지구적 핵테러방지구상’(GICNT) 회의 개최(모로코
라바트)
- 11.01 북한, 6자회담 복귀선언
- 11.0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러
- 11.07 미국 중간선거 실시
- 11.08 미·중 제3차 고위급회담 개최
- 11.15 APEC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 11.17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
- 11.18~11.19 하노이 APEC 정상회담 개최
- 11.19 미·중 해군, 2단계 합동수색·구조훈련 실시(남중국해)
- 11.21 후진타오 주석 인도 방문, 중·인도 정상회담 개최
- 11.23 후진타오 주석 파키스탄 방문, 중·파키스탄 정상회담 개최
- 11.28~11.29 북·미·중 3자 접촉(베이징)
- 11.29 중·일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 12.04~12.08 제5차 한·미 FTA 협상(몬태나 빅스카이)
- 12.14~12.15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베이징)
- 12.18~12.22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베이징)
- 12.21 유엔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정식채택

북한사건 일지

- 01.01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 01.10~01.18 김정일 위원장 방중(선전, 광조우 등)
- 01.16 2·16 경축 제34차 전국농업근로자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최
- 01.17 북·중 정상회담 개최
- 01.25 전국농업대회(4·25 문화회관)
- 01.26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 02.04~02.07 제13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개최(베이징)
- 02.15 김정일 64회 생일(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02.23~02.24 제3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평양)
- 03.01 「마약금지에 관한 포고령」 선포
- 03.08 제96회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 궁전)
- 03.18~03.28 장성택 부부장 방중(선전, 광조우 등)
- 03.26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전집』 제62권 출판
- 04.04 차오강완(상장) 중국 국방부장, 평양 도착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회담
- 04.10 북·중 합영사료공장 생산 개시(평양)
- 04.10~4.18 제24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최(평양)
- 04.10 북·중 2006~2008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 04.23 대형 열차 충돌사고(부래산 역전 부근)
- 04.26 중국 남방항공,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재개
- 05.15 시리아와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체결
- 05.15~05.18 제9차 평양 국제상품전람회(3대혁명 전시관)
- 05.23 브라질과 「무역협정」 체결
- 05.25 대형 버스사고(회령-청진 간 도로)
- 06.01 북·중 외교부장관 회담(베이징)
- 07.01 화물열차 전복(양덕-고원 구간)
- 07.05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 시험발사
- 07.11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평양)
- 07.14~07.16 집중호우
- 07.15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 채택
- 07.16 외무성 반발 성명
- 07.22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사장 방북
- 08.13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 개원(평양)
- 08.20 림동옥 통일선전부장 사망
- 09.02 '서면호 격침일' 140주년 군중집회(평양)

-
- 09.14 김영재 무역성 부상, 주러 북한대사 임명
10.03 핵실험 계획 성명발표
10.05 백학림 차수 사망
10.06 김정일 국방위원장, 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축하
10.09 북한 핵실험
10.11 러시아, 북한에 12,800톤 곡물 전달
10.13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10.14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채택
10.16 중앙보고대회(평양 체육관)
10.17 ‘트·씨’ 결성 80돌
10.19 탕자쉬안 국무위원·김정일 위원장 회동(평양)
10.20 핵실험 성공 환영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김일성 광장)
10.31 북·미·중 3자 및 북·미 양자협의(베이징)
11.01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복귀선언 발표
11.14 일본, 대북 추가제재 조치 결정
11.23 계응태 당비서 겸 정치국위원 사망
12.04 「조선무역발전촉진위원회」 대표단 사할린 방문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 | | | | |
|---------|--|-------|----|---------|
| 2004-01 |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4-02 | A CRITICAL JUNCTURE | 최진욱 | 저 | 4,000원 |
| 2004-03 |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임순희 | 저 | 5,000원 |
| 2004-04 |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 황병덕 외 | 공저 | 9,500원 |
| 2004-06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4-07 |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 홍관희 | 저 | 4,500원 |
| 2004-08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 김영운 | 저 | 7,500원 |
| 2004-09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정영태 | 저 | 5,000원 |
| 2004-10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4-11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 박영호 | 저 | 5,500원 |
| 2004-13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 임강택 외 | 공저 | 6,000원 |
| 2004-14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 저 | 7,500원 |
| 2004-15 |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 손기웅 | 저 | 5,000원 |
| 2004-16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 조한범 | 저 | 4,500원 |
| 2004-17 |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 여인근 외 | 공저 | 9,000원 |
| 2004-18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이금순 | 저 | 5,000원 |
| 2004-19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최수영 | 저 | 4,000원 |
| 2004-20 |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 이 석 | 저 | 9,000원 |
| 2005-01 |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 전성훈 | 저 | 7,000원 |
| 2005-02 |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 최의철 | 저 | 8,000원 |
| 2005-03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 조정아 | 저 | 7,000원 |
| 2005-04 |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 김규륜 | 저 | 4,500원 |
| 2005-05 |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김영춘 | 저 | 5,000원 |
| 2005-06 |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 이금순 | 저 | 6,500원 |
| 2005-07 |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 임순희 | 저 | 5,500원 |

| | | | | |
|---------|---|----------|----|---------|
| 2005-08 |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황병덕 | 저 | 9,000원 |
| 2005-09 |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 김영운 | 저 | 7,000원 |
| 2005-10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 손기웅 | 저 | 5,500원 |
| 2005-11 |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조한범 | 저 | 6,000원 |
| 2005-12 |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13 |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 김수암 | 저 | 7,000원 |
| 2005-14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 허문영 | 저 | 7,500원 |
| 2005-15 |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5-1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 조민 | 저 | 6,000원 |
| 2005-17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 이석 | 저 | 7,000원 |
| 2005-18 |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 최수영 | 저 | 5,500원 |
| 2005-19 |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배정호 | 저 | 6,500원 |
| 2005-20 |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 김국신 | 저 | 5,000원 |
| 2005-21 |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 박영호 | 저 | 8,500원 |
| 2005-22 |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23 |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 박형중 | 저 | 5,000원 |
| 2006-01 |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임강택 | 저 | 7,000원 |
| 2006-03 |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 최수영 | 저 | 5,000원 |
| 2006-04 |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이석 | 저 | 8,000원 |
| 2006-05 |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6 |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전현준 외 | 공저 | 10,000원 |
| 2006-07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영운 | 저 | 10,000원 |
| 2006-08 |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 손기웅 | 저 | 6,000원 |
| 2006-09 |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 정영태 | 저 | 7,500원 |
| 2006-10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 저 | 8,500원 |
| 2006-11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서재진 | 저 | 10,000원 |
| 2006-12 |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조민 | 저 | 6,500원 |
| 2006-13 |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6-14 |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 박영호 | 저 | 7,000원 |
| 2006-15 |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6 |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임순희 | 저 | 8,000원 |
| 2006-17 |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저 | 10,000원 |
| 2006-18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 조정아 | 저 | 6,000원 |
| 2006-19 |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학술회의총서

| | | | | |
|---------|--|--|--|---------|
| 2004-01 |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 | | 10,000원 |
| 2004-02 |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 | | 10,000원 |
| 2004-03 |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 | | 8,000원 |
| 2004-04 |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 | | 7,500원 |
| 2004-05 |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 | | 5,500원 |
| 2004-06 |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 | 6,500원 |
| 2004-07 |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 | | 10,000원 |
| 2004-08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 | | 9,000원 |
| 2005-01 |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 | | 8,000원 |
| 2005-02 |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 | | 10,000원 |
| 2005-03 |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 | | 10,000원 |
| 2005-04 |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 | | 10,000원 |
| 2005-05 |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 | | 10,000원 |
| 2006-0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 | | 9,500원 |
| 2006-03 |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 | | 10,000원 |
| 2006-04 |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 | | 9,500원 |

협동연구총서

| | | | | |
|---------|--|-------|----|---------|
| 2004-01 |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 | 10,000원 |
| 2004-02 |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 여인곤 외 | 공저 | 7,000원 |
| 2004-03 |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4 |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 고정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6 |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7 |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금순 외 | 공저 | 8,500원 |
| 2004-08 |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5,500원 |
| 2004-09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 | 10,000원 |
| 2004-1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 오명석 외 | 공저 | 5,500원 |
| 2004-11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 김명섭 외 | 공저 | 5,000원 |

| | | | | |
|------------|---|-------|----|---------|
| 2004-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 양영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3 |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 박경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4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 서종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5 |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 조한범 외 | 공저 | 9,500원 |
| 2004-16 |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최진욱 외 | 공저 | 6,500원 |
| 2004-17 |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윤종설 외 | 공저 | 5,000원 |
| 2004-1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 전재경 외 | 공저 | 8,000원 |
| 2004-2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 이진국 외 | 공저 | 6,000원 |
| 2004-2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 김이선 외 | 공저 | 8,500원 |
| 2004-2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 윤철경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3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4 |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 박기홍 외 | 공저 | 6,000원 |
| 2004-25 |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 김광익 외 | 공저 | 4,000원 |
| 2004-26 |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김광익 | 저 | 4,500원 |
| 2005-01-01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 김명섭 외 | 공저 | 9,500원 |
| 2005-01-0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 문옥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3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 서종석 외 | 공저 | 9,000원 |
| 2005-01-04 |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전성훈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5 |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6 |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 최의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7 |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 윤종설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 전재경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10 |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장준오 외 | 공저 | 8,000원 |
| 2005-01-1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이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 오해섭 외 | 공저 | 9,000원 |

| | | | |
|---|-------|----|---------|
|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 한만길 외 | 공저 | 9,000원 |
|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 | 10,000원 |
|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 김국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 전봉근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 조한범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 | 10,000원 |
|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논 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4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 | | |
|-------------|--|--------|
| 독일통일백서 2005 | |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 | 6,000원 |
|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 | 6,000원 |
|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 | 6,000원 |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 | | |
|---------|------------------------------------|-------------------------|
| 2004-01 |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
| 2004-02 |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 북한연구실 |
| 2004-03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 조한범 |
| 2004-04 |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 박형중 |
| 2004-05 |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 최의철 |
| 2004-06 |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 전성훈 |
| 2004-07 |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 여인곤 |
| 2004-0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 이 석, 최진욱 |
| 2004-09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 최의철, 임순희 |
| 2004-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 이교덕, 신상진 |
| 2004-11 |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영춘 |
| 2004-12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 전성훈 |
| 2004-13 |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

| | | |
|---------|--|------------------------------|
| 2004-14 |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 김영춘 |
| 2004-15 |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 김영윤, 박정란 |
| 2004-16 |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 김수암, 이금순 |
| 2004-17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박영호, 김국신 |
| 2004-18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김국신, 박영호 |
| 2004-19 |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 전병곤 |
| 2004-20 |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4-21 |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 전병곤 |
| 2005-01 |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
| 2005-02 |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김영윤, 최수영 |
| 2005-03 |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 정영태 |
| 2005-04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 |
| 2005-05 |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
| 2005-06 | 중국 10기집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 전병곤 |
| 2005-07 |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 김영춘 |
| 2005-08 |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 김영윤, 최수영 |
| 2005-09 |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 이금순, 임순희 |
| 2005-10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 박형중, 최진욱 |
| 2005-11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 최의철, 임순희 |
| 2005-12 |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 배정호 |
| 2005-13 |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 김수암 |
| 2005-14 | 북한 주변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 홍병덕 |
| 2005-15 |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 손기웅 |
| 2005-16 | 일본 총선 결과 분석 | 김영춘 |
| 2005-17 |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
| 2005-18 |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 배정호 |
| 2005-19 |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
| 2005-20 |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 김규륜 |
| 2006-01 |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
| 2006-02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전현준, 김영윤 |
| 2006-03 |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김수암, 이금순 |
| 2006-04 |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
| 2006-05 |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6-06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 서재진, 김영윤 |
| 2006-07 |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 김국신, 배정호 |

| | | |
|---------|-----------------------------|-------------------------|
| 2006-08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 김영운 |
| 2006-09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6-10 |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 배정호 |
| 2006-11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
| 2006-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6-13 |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05-01 |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 허문영 |
| 2005-02 |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
| 2005-03 |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 홍용표, 조한범 |
| 2005-04 |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 김근식 |
| 2005-05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 조성렬 |
| 2005-06 |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
| 2006-01 |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김영운 |
| 2006-02 |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 박영호 |
| 2006-03 |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 임을출 |
| 2006-04 |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 김규륜 |
| 2006-05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 전현준 |
| 2006-06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서보혁 |
| 2006-07 |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 고재홍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 | | |
|---------|---|----------------------------------|
| 2004-01 |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 Kyo Duk Lee |
| 2004-02 |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 Hyeong Jung Park |
| 2004-03 |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 Jae Jean Suh |
| 2004-04 |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 2004-05 |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

| | | |
|---------|--|----------------------------------|
|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Hyun Joon Chon |
| 2005-01 |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 Kang-Taeg Lim & Sung-Hoon Lim |
| 2005-02 |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 Lim Soon Hee |
| 2005-03 |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 Young-Yoon Kim |
| 2005-04 |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 Jae Jean Suh |
| 2005-05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 2005-06 |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 Suk Lee |
| 2006-01 |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 Kim Soo-Arn |
| 2006-02 |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 Huh, Moon-Young |
| 2006-03 |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 Cho, Min |
| 2006-04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 Choi, soo-young |
| 2006-05 |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 Keumsoon Lee |
| 2006-06 |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